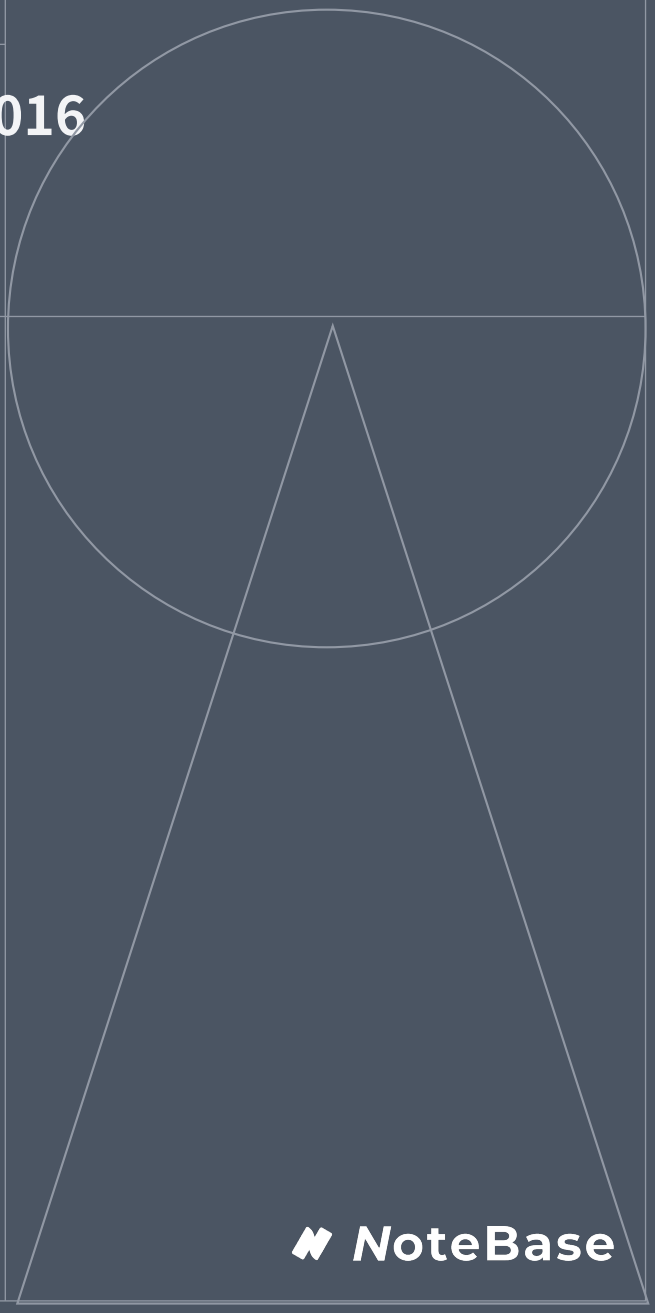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전문직/세무사 · 재정학 · 2016



NoteBase

기출OX 해설집

전문직/세무사 · 재정학 · 2016

전문직/세무사 · 재정학 · 2016

문 1. 외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세의 사례는?

① 모든 상품에 대해서 10%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경우

② 고소득 근로자들에게 고율의 누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③ 대기오염을 감축시킬 목적으로 오염발생 기업 제품에 과세하는 경우

④ 고가부동산의 거래에 고율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⑤ 중소기업의 법인소득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경우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외부불경제를 일으키는 행위에 세금을 부과하여 외부비용을 행위자의 의사결정에 반영시키는 과세를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피구세는 오염처럼 제3자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에 세금을 부과하여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차이를 줄이는 조세이다. 과세로 오염 유발 생산이나 소비가 감소하면 외부불경제가 완화된다. 일반적인 재원 조달, 소득 재분배 또는 특정 산업 지원을 위한 조세와 구별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모든 상품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소비세는 오염 유발 정도와 연결되지 않으므로 외부성 교정을 위한 과세라고 볼 수 없다. 틀린 표현은 '모든 상품에 대해서 10%'이며, 올바르게는 오염을 유발하는 상품이나 행위에 그 외부비용을 반영하여 선택적으로 과세하는 경우이다.
② X —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누진소득세는 주로 소득 재분배와 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하며, 외부비용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직접 줄이는 세금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고소득 근로자들에게 고율의 누진소득세'이며, 올바르게는 오염 배출과 같은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주체에 과세하는 경우이다.
③ O — 오염발생 기업의 제품에 과세하면 그 기업이 부담하지 않던 대기오염의 외부비용이 제품의 비용과 가격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오염 유발 생산과 소비가 감소하므로 외부성 문제를 교정하는 피구세의 사례이다.
④ X — 고가부동산 거래에 대한 고율의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나 자산 보유 관련 정책 목적의 조세일 수 있으나, 선지에는 제3자에게 발생하는 외부비용과의 연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틀린 표현은 '고가부동산의 거래'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삼은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외부비용을 발생시키는 거래나 행위에 그 비용을 반영하여 과세하는 경우이다.
⑤ X — 중소기업의 법인소득에 부과하는 법인세는 기업의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일반적인 조세이며 오염 등 외부불경제의 크기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중소기업의 법인소득에 법인세'이며, 올바르게는 오염발생 기업의 배출량이나 오염 유발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이다.

오답 포인트

'세금을 부과한다'는 사실만으로 외부성 교정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①·②·④·⑤는 과세 대상이 외부비용의 발생과 직접 연결되지 않지만, ③은 대기오염을 줄인다는 목적과 오염 유발 제품이라는 과세 대상이 모두 명시되어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과세 대상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인지, 세금이 그 외부비용을 행위자의 비용에 반영하여 해당 행위를 줄이는지 확인한다. 두 조건이 충족되면 외부불경제를 교정하는 피구세에 해당한다.

암기 포인트

피구세는 '남에게 떠넘긴 비용을 오염 유발자에게 되돌리는 세금'이다.

NoteBase

문 2. 우리나라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계에서 면세자 비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향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모두 양의 값이며 경제성장률이 더 높다. 현재의 소득공제 항목은 모두 존치된다.)

ㄱ. 소비활력 제고를 위해 간이과세자의 간이과세 적용요건을 완화한다.
ㄴ. 면세점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
ㄷ.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의 인적공제를 확대한다.
ㄹ. 개인연금저축의 공제액을 확대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면세자 비율을 낮추려면 과세 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공제로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폭을 억제해야 한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면세점은 소득세 부담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소득 수준이다. 소득공제가 확대되면 과세표준이 줄어 면세자가 늘어날 수 있고, 면세점을 명목상 고정한 상태에서 소득이 증가하면 면세점 아래에 머무는 사람의 비율은 낮아진다. 부가가치세의 간이과세 범위를 넓히는 것은 일반과세 범위를 축소하여 과세기반을 넓히려는 방향과 반대이다.

ㄱ: 옳지 않다. 간이과세 적용요건의 완화는 적용 대상을 확대하므로 면세자 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간이과세 적용요건을 강화하거나 적용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

ㄴ: 옳다.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으로 소득이 증가하는데 면세점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면 면세점이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져 면세자 비율이 하락한다.

ㄷ: 옳지 않다. 다자녀 가정의 인적공제를 확대하면 과세표준이 줄어 면세자가 늘어날 수 있다. 올바르게는 면세자 비율을 낮추려면 인적공제를 확대하지 않거나 축소해야 한다.

ㄹ: 옳지 않다. 개인연금저축 공제액을 확대하면 과세표준과 세액 부담이 줄어 면세자가 늘어날 수 있다. 올바르게는 공제액을 확대하지 않거나 축소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옳지 않지만 ㄴ은 면세자 비율을 낮추는 방안이므로 이 조합은 틀리며, ㄷ과 ㄹ도 빠져 있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ㄷ, ㄹ이다.
② X — ㄷ은 옳지 않지만 ㄴ은 옳은 방안이고, ㄱ과 ㄹ도 빠져 있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ㄷ, ㄹ이다.
③ X — ㄷ과 ㄹ은 모두 옳지 않지만 ㄱ이 빠져 있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ㄷ, ㄹ이다.
④ X — ㄱ과 ㄹ은 옳지 않지만 ㄴ은 면세점을 명목상 유지하여 면세자 비율을 낮추는 방안이고, ㄷ이 빠져 있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ㄷ, ㄹ이다.
⑤ O — 면세자 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아닌 것은 간이과세 범위를 넓히는 ㄱ, 인적공제를 확대하는 ㄷ, 개인연금저축 공제액을 확대하는 ㄹ이므로 이 조합이 정확하다.

오답 포인트

ㄴ의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를 아무 변화가 없는 정책으로 보면 틀리기 쉽다. 소득은 증가하지만 면세점은 고정되므로 면세점의 상대적 수준이 낮아져 면세자 비율은 감소한다. 반면 ㄷ과 ㄹ은 정책 목적이 긍정적으로 보여도 공제 확대 자체는 과세표준을 줄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정책이 과세기반을 넓히는지 줄이는지를 판단한다. 간이과세 범위와 소득공제를 확대하면 과세기반이 좁아지고, 소득이 증가할 때 면세점을 고정하면 과세기반이 상대적으로 넓어진다.

암기 포인트

면세자 비율 하락은 간이과세·공제의 축소와 면세점의 명목 고정에 연결된다.

NoteBase

문 3. 원점에 대해 볼록한 무차별곡선을 가진 소비자 A는 열등재인 X재와 정상재인 Y재의 소비에 있어서 효용극대화를 달성하고 있다. 정부가 X재에 t_X의 세율로 과세한다고 할 때 가격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 대체효과에 의해, A의 X재 소비를 감소시키고 Y재 소비를 증가시킨다.
ㄴ. 대체효과에 의해, A의 X재 소비를 감소시키고 Y재 소비를 감소시킨다.
ㄷ. 소득효과에 의해, A의 X재 소비를 증가시키고 Y재 소비를 증가시킨다.
ㄹ. 소득효과에 의해, A의 X재 소비를 증가시키고 Y재 소비를 감소시킨다.
ㅁ. 소득효과에 의해, A의 X재 소비를 감소시키고 Y재 소비를 증가시킨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ㄱ, ㅁ
④ ㄴ, ㄷ
⑤ ㄴ, ㄹ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X재에 대한 과세로 X재의 상대가격이 상승할 때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X재·Y재 소비에 미치는 방향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대체효과: 효용수준을 고정한 채 상대가격 변화만 반영하는 효과이다. X재의 가격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비싸진 X재 소비는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싸진 Y재 소비는 증가한다.
소득효과: 가격 상승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여 생기는 효과이다. 실질소득이 감소하면 열등재인 X재 소비는 증가하고 정상재인 Y재 소비는 감소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ㄱ과 ㄹ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옳지만 ㄷ의 'Y재 소비를 증가시킨다'가 틀리다. 실질소득이 감소하면 정상재인 Y재 소비는 감소하므로 ㄷ이 아니라 ㄹ이 옳고, 올바른 조합은 ㄱ, ㄹ이다.
② O — 대체효과는 X재 소비를 감소시키고 Y재 소비를 증가시키므로 ㄱ이 옳다. 소득효과는 열등재 X재 소비를 증가시키고 정상재 Y재 소비를 감소시키므로 ㄹ도 옳다.
③ X — ㄱ은 옳지만 ㅁ의 'X재 소비를 감소시킨다'가 틀리다.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소득효과는 열등재 X재 소비를 증가시키므로 ㅁ이 아니라 ㄹ이 옳고, 올바른 조합은 ㄱ, ㄹ이다.
④ X — ㄷ뿐 아니라 ㄴ의 'Y재 소비를 감소시킨다'도 틀리다. 대체효과는 상대적으로 싸진 Y재 소비를 증가시키므로 ㄴ은 ㄱ으로, 소득효과는 정상재 Y재 소비를 감소시키므로 ㄷ은 ㄹ로 고쳐야 한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ㄹ이다.
⑤ X — ㄹ은 옳지만 ㄴ의 'Y재 소비를 감소시킨다'가 틀리다. 대체효과는 상대적으로 싸진 Y재 소비를 증가시키므로 ㄴ이 아니라 ㄱ이 옳고, 올바른 조합은 ㄱ, ㄹ이다.

오답 포인트

가격 상승이 두 효과에서 모두 X재 소비를 줄인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열등재의 소득효과는 가격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때문에 X재 소비를 늘리는 방향이며, 정상재 Y재의 소비는 줄이는 방향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대체효과는 '비싸진 재화 감소, 상대적으로 싸진 재화 증가'로 판단한다. 다음으로 소득효과는 실질소득 감소를 기준으로 열등재는 증가, 정상재는 감소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X재 가격 상승: 대체효과는 X↓·Y↑, 소득효과는 열등재 X↑·정상재 Y↓이다.

NoteBase

문 4. 편익과 비용의 흐름이 다음 표와 같은 공공투자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단, 사회적 할인율은 10%이다.)

분석기간	편익(억원)	비용(억원)
0기	0	10
1기	10	10
2기	10	10
3기	10	10
4기	10	0

◯ 사업의 내부수익률은 12%이다.
◯ 본 사업의 순현재가치는 1이다.
◯ 본 사업의 편익비용비율(B/C ratio)은 1보다 작다.
◯ 사회적 할인율이 7.5%로 인하되면 순현재가치는 증가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순편익의 현재가치로 내부수익률, 순현재가치, 편익비용비율, 할인율 변화의 효과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0기의 순편익은 -10억 원이고, 1기부터 3기까지는 편익과 비용이 각각 10억 원이므로 순편익이 0이다. 4기의 순편익은 10억 원이다. 따라서 이 사업의 순편익 흐름은 -10, 0, 0, 0, 10억 원이다.

사용할 공식

순현재가치는 $NPV = \sum_{t=0}^{n} \frac{B_t - C_t}{(1+r)^t}$이고, 내부수익률은 $NPV = 0$이 되게 하는 할인율이다. 편익비용비율은 $B/C = \frac{\sum B_t/(1+r)^t}{\sum C_t/(1+r)^t}$이다. 서로 다른 시점의 편익과 비용을 같은 시점의 가치로 비교해야 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사회적 할인율이 10%일 때 $NPV = -10 + \frac{10}{(1.1)^4} \approx -3.17$이므로 순현재가치는 약 -3.17억 원이다. 따라서 '순현재가치는 1이다'는 틀리다. 내부수익률은 $-10 + 10/(1+IRR)^4 = 0$을 만족하므로 $IRR = 0\%$이고, 12%가 아니다. 또한 순현재가치가 음수이므로 할인된 총편익이 할인된 총비용보다 작아 $B/C < 1$이다. 할인율이 7.5%로 낮아지면 4기의 양(+)의 순편익을 덜 할인하며, $NPV = -10 + \frac{10}{(1.075)^4} \approx -2.51$이므로 순현재가치는 약 -2.51억 원으로 증가한다. 네 문장 중 옳은 것은 세 번째와 네 번째, 모두 2개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옳은 문장은 0개가 아니라 2개이다. 올바르게는 '2개'이다.
② X — 옳은 문장은 1개가 아니라 2개이다. 올바르게는 '2개'이다.
③ O — 편익비용비율이 1보다 작다는 문장과 할인율 인하 시 순현재가치가 증가한다는 문장이 옳으므로 총 2개이다.
④ X — 옳은 문장은 3개가 아니라 2개이다. 올바르게는 '2개'이다.
⑤ X — 내부수익률이 12%라는 문장과 순현재가치가 1이라는 문장이 틀리므로 4개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2개'이다.

오답 포인트

1기부터 3기까지 편익과 비용이 모두 10억 원이라는 사실을 편익 10억 원만 발생한 것으로 읽으면 안 된다. 두 금액은 서로 상쇄되어 각 기의 순편익이 0이다. 또한 할인율이 낮아질 때 미래의 양(+)의 순편익 현재가치는 커지므로, 순현재가치가 음수이더라도 기존 값보다 증가할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시점의 편익에서 비용을 빼 순편익 흐름을 만든다. 그다음 주어진 할인율로 순현재가치를 계산하고, $NPV = 0$인 할인율이 내부수익률이라는 기준과 $NPV < 0$이면 $B/C < 1$이라는 관계를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이 문항의 순편익은 '처음 -10, 중간 0, 마지막 +10'이다. 같은 10억 원을 나중에 회수하므로 내부수익률은 0%이고, 양(+)의 미래 순편익이 있을 때 할인율 하락은 순현재가치를 높인다.

NoteBase

문 5. 재산세와 같은 일반적인 자산과세(property tax)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산과세의 세부담자는 자산소유자이지만, 주로 물건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대물세로 간주한다.

② 자산수익률이 노동수익률보다 높은 경우, 자산과세의 강화는 소득분배 불평등도를 완화시킨다.

③ 자산과세를 지방세의 근간으로 하면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

④ 이론적으로 동결효과(lock-in effect)로 인하여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킨다.

⑤ 능력원칙과 편익원칙을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과세방식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일반적인 자산과세의 성격, 분배 및 지방재정 효과, 동결효과, 과세원칙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산과세는 토지·건물 등 자산의 보유 또는 이전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조세이다. 자산가액은 담세능력의 지표가 될 수 있고 지방공공서비스의 편익이 자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능력원칙과 편익원칙 양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반면 양도차익 과세 등에서 나타나는 동결효과는 세부담을 피하려 자산 처분을 미루게 하므로 거래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자산과세의 납세의무자는 자산소유자이지만, 소유자의 인적 사정보다 토지·건물과 같은 물건을 중심으로 과세하므로 일반적으로 대물세의 성격을 갖는다.
② O — 자산수익률이 노동수익률보다 높으면 자산보유자에게 소득과 부가 더 집중될 수 있다.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 이러한 집중을 억제하여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③ O — 지역마다 부동산 가격과 자산세원이 다르므로 자산과세를 지방세의 근간으로 삼으면 세원이 풍부한 지역과 빈약한 지역 사이의 재정력 격차가 커질 수 있다.
④ X — 틀린 표현은 '동결효과로 인하여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킨다'이다. 동결효과는 과세를 피하거나 미루기 위해 보유자가 자산 처분을 연기하는 현상이므로, 올바르게는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킨다고 해야 한다.
⑤ O — 자산가액을 담세능력의 지표로 보면 능력원칙을 구현할 수 있고, 지방공공서비스의 편익이 부동산 가치에 반영된다고 보면 그 가치에 대한 과세로 편익원칙도 구현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④의 함정은 '동결'이라는 용어의 방향을 반대로 제시한 데 있다. 동결효과는 자산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계속 보유하게 만드는 효과이므로 거래 활성화가 아니라 거래 위축과 연결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산 처분에 과세가 연계되어 처분을 미룰 유인이 생기면 동결효과로 판단한다. 처분 연기는 거래량을 줄이므로 ‘거래 활성화’라는 표현은 틀리다. 지방세 효과는 지역별 자산세원의 격차가 재정력 격차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동결효과는 처분 연기와 거래 위축이다. 자산과세는 대물세 성격을 가지며 능력원칙과 편익원칙의 근거가 모두 가능하다.

NoteBase

문 6. 재정연방체제이론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기능배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재 공급효과가 미치는 공간적 범위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급해야 할 공공재를 구분해야 한다.

② 조세부담-편익 연계가 강한 공공재는 지방정부가, 그렇지 않은 공공재는 중앙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무임승차의 가능성이 높은 공공재의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그렇지 않은 공공재는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국방과 외교는 중앙정부가, 쓰레기 수거와 거리청소는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부정적 외부성이 존재하는 공공재는 중앙정부가, 긍정적 외부성이 존재하는 공공재는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재정연방체제에서 공공재의 편익 범위, 조세부담과 편익의 연계, 무임승차 및 외부성이 정부 간 기능배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재정연방주의의 기능배분 원칙은 공공재의 편익과 비용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해당 정부의 관할구역과 가능한 한 일치시키는 것이다. 전국적 공공재와 지역 간 파급효과가 큰 공공재는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고, 편익이 한 지역에 주로 귀속되는 지방공공재는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 조세부담과 편익의 연계가 강할수록 지방정부가 주민의 선호를 반영하여 공급하기 쉽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공공재의 편익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와 공급 주체의 관할범위를 대응시키는 것이 기능배분의 기본 원칙이다. 전국적 편익은 중앙정부, 지역적 편익은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
② O — 조세부담과 편익의 연계가 강하면 주민이 부담과 편익을 함께 고려하여 지역별 선호를 드러낼 수 있으므로 지방정부 공급이 적합하다. 연계가 약해 전국적 재원 조달과 조정이 필요하면 중앙정부 공급이 적합하다.
③ O — 무임승차 가능성이 높으면 개별 지방정부가 충분히 공급할 유인이 약하고 다른 지역의 부담에 편승할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 공급이 적합하다. 무임승차 문제가 작고 편익이 지역에 한정되면 지방정부 공급이 적합하다.
④ O — 국방과 외교의 편익은 전국에 미치므로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 쓰레기 수거와 거리청소의 편익은 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귀속되므로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
⑤ X — 틀린 표현은 '긍정적 외부성이 존재하는 공공재는 지방정부가 공급'한다는 부분이다. 긍정적 외부성이 다른 지역으로 파급되면 지방정부는 지역 밖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아 공공재를 과소 공급할 수 있다. 올바르게는 외부성의 긍정·부정 여부만으로 공급 주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 파급 범위를 기준으로 하며, 파급효과가 크면 중앙정부의 공급이나 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⑤는 외부성의 부호를 정부 간 기능배분 기준처럼 제시한 것이 함정이다. 긍정적 외부성도 지역 밖으로 편익이 확산되면 지방정부의 과소 공급을 초래하므로 지방정부에 그대로 맡기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공재의 편익·비용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먼저 본다. 전국적 범위이거나 지역 간 파급효과와 무임승차가 크면 중앙정부, 편익 범위가 지역에 한정되고 조세부담과 편익의 연계가 강하면 지방정부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전국·파급·무임승차는 중앙, 지역편익·부담편익 연계는 지방이다.

NoteBase

문 7.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 지원이 초래하는 끈끈이효과(flypaper effec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정부의 공공재 지출증대 효과는 중앙정부의 정액교부금 지원을 통한 경우가 중앙정부의 조세감면-주민소득증가에 의한 경우보다 효과가 더 크다.

② 중앙정부의 교부금으로 인해 지방공공재의 생산비가 하락한 것으로 주민들이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③ 지역주민이 중앙정부의 교부금 지원에 따른 한계조세가격의 하락으로 인식하는 재정착각에 빠질 수 있다.

④ 관료들이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⑤ 지방자치단체 관료들의 예산극대화 동기와 무관하지 않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동일한 크기의 정액교부금과 주민소득 증가가 지방공공재 지출에 미치는 효과의 차이 및 끈끈이효과의 설명 가설을 묻는다.

핵심 개념

끈끈이효과는 중앙정부의 정액교부금이 같은 금액의 주민소득 증가보다 지방정부의 공공재 지출을 더 크게 늘리는 현상이다. 돈이 주민에게 돌아가기보다 지방정부 예산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 관점에는 주민이 교부금 때문에 지방공공재의 조세가격이 낮아졌다고 오인하는 재정착각과 관료의 예산극대화 동기가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 끈끈이효과의 정의에 부합한다. 같은 규모라면 중앙정부의 정액교부금이 조세감면에 따른 주민소득 증가보다 지방공공재 지출을 더 크게 늘린다.

② O — 재정착각 가설에 따르면 주민은 교부금으로 인해 자신이 부담하는 지방공공재의 생산비용 또는 조세가격이 낮아진 것처럼 인식할 수 있다. 그 결과 공공지출 수요가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

③ O — 교부금이 실제 주민의 한계조세가격을 그만큼 낮추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이 이를 한계조세가격의 하락으로 오인하면 지방공공지출이 증가한다. 이는 끈끈이효과를 설명하는 재정착각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교부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할 때'이다. 관료행태 가설에서는 관료가 교부금 정보를 주민에게 충분히 공개하지 않거나 그 재정적 의미를 불투명하게 하여 주민의 조세감면 요구를 약화시키고 예산을 늘릴 때 끈끈이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⑤ O — 예산 규모를 확대하려는 지방자치단체 관료는 교부금을 주민의 조세부담 경감보다 공공지출 확대에 사용할 유인이 있으므로, 관료의 예산극대화 동기는 끈끈이효과의 한 설명이 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의 함정은 '공개'라는 단어이다. 관료행태 가설은 교부금 정보가 주민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정보 비대칭과 예산극대화 동기를 강조한다. 공개가 잘될수록 주민은 교부금을 파악하여 조세감면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설명과 반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동일 금액의 정액교부금과 주민소득 증가를 비교하여 교부금 쪽의 지출 증가가 더 크면 끈끈이효과이다. 원인 선지에서는 '조세가격을 낮게 오인한다', '교부금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한다', '관료가 예산을 극대화한다'는 표현은 연결하고, 교부금의 완전한 공개가 현상을 만든다는 표현은 배제한다.

암기 포인트

교부금은 소득보다 지출에 더 강하게 붙고, 재정착각과 관료의 예산극대화가 이를 설명한다.

NoteBase

문 8. A국의 소득을 소득계층별, 소득형태별로 정리한 표에 관한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소득공제는 없다.)

구 분	총소득(%)	노동소득(%)	자산소득(%)	기타소득(%)
상위(1 ~ 10%)	29.4	31.2	96.9	66.3
중위(11 ~ 60%)	51.0	54.3	3.1	33.7
하위(61 ~ 100%)	19.6	14.5	0.0	0.0
소득형태별 점유율(%)	100.0	86.0	3.0	11.0

① 동일한 세율로 세수를 극대화하려면 자산 및 기타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② 자산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위소득자라 할 수 있다.

③ 국가 전체로 보면 노동소득에서 발생하는 금액이 제일 크다.

④ 효과적인 소득재분배를 위해서는 금융소득과 부동산(임대, 양도)소득에 중과세할 필요가 있다.

⑤ 조세의 효율성 측면에서 판단하자면 동일한 조세 수입 가정 하에 모든 소득에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좋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소득계층별 행이 각 소득형태의 계층별 분포를, 마지막 행이 국가 전체 소득에서 각 소득형태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는 점을 구분하여 해석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열별로 상위·중위·하위 계층의 비율 합계가 100%임을 확인하여 각 소득형태가 어느 계층에 귀속되는지 읽는다.
2. 마지막 행의 소득형태별 점유율로 국가 전체 소득 중 노동소득·자산소득·기타소득의 비중을 비교한다.
3. 세수 규모는 과세표준의 크기와, 재분배는 소득의 계층별 집중도와 연결하여 판단한다.

NoteBase

핵심 근거

국가 전체 소득의 소득형태별 점유율은 노동소득 86.0%, 자산소득 3.0%, 기타소득 11.0%이다. 또한 상위 1~10% 계층에 귀속되는 비율은 노동소득 31.2%, 자산소득 96.9%, 기타소득 66.3%이다. 따라서 동일한 세율에서는 과세표준이 가장 큰 노동소득에서 가장 많은 세수를 얻으며, 자산소득과 기타소득은 상위 계층에 집중되어 재분배 과세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 마지막 행에서 자산소득과 기타소득의 점유율 합계는 14.0%이고 노동소득은 86.0%이다.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가장 큰 노동소득에서 세수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틀린 표현인 '자산 및 기타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는 '노동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세수 극대화에 더 효과적이다'로 고쳐야 한다.
② O — 자산소득의 96.9%가 상위 1~10% 계층에 귀속되고 중위 계층에는 3.1%, 하위 계층에는 0.0%가 귀속된다. 자산소득이 거의 전부 상위소득자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해석과 부합한다.
③ O — 마지막 행에서 노동소득의 점유율은 86.0%로, 자산소득 3.0%와 기타소득 11.0%보다 크다. 국가 전체 소득에서 노동소득 금액이 가장 크다는 해석이 맞다.
④ O — 금융소득에 해당하는 자산소득의 96.9%, 임대·양도 등 기타소득의 66.3%가 상위 1~10% 계층에 귀속된다. 상위 계층에 집중된 소득을 상대적으로 무겁게 과세하면 세후소득 격차를 줄이는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O — 모든 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단일세율을 적용하면 특정 소득형태에만 높은 세율을 적용할 때 생기는 소득형태 간 전환 유인을 줄일 수 있다. 동일한 세수를 확보한다는 조건에서 넓은 과세표준과 단일세율은 조세로 인한 자원배분 왜곡을 줄이는 방향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상위 계층 집중도'와 '국가 전체에서의 소득 비중'을 혼동하게 만든다. 자산소득은 상위 계층 집중도가 96.9%로 높지만 국가 전체 소득에서의 점유율은 3.0%에 불과하다. 재분배 효과를 판단할 때는 집중도를 보고, 동일 세율에서의 세수 규모를 판단할 때는 전체 소득 점유율을 보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의 세로 합계가 100%이면 각 소득형태의 계층별 분포로 읽고, 별도로 제시된 전체 점유율은 과세표준의 상대적 크기로 읽는다. 세수 극대화는 전체 점유율이 큰 소득, 재분배는 상위 계층 집중도가 높은 소득과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세수는 소득의 크기, 재분배는 소득의 집중도이다.

NoteBase

문 9. 린달(E. Lindahl)의 자발적 협상모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부정적 외부성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개인 간의 협상을 통해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 린달 모형의 정책적 함의는 '개인 간 갈등해소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함'을 의미한다.
◯ 린달 모형에서 도출된 해는 사뮤엘슨의 효율성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 합의에서 결정되는 비용의 부담비율이 시장에서 가격의 기능과 유사함을 밝힌 모형이다.
◯ 정부의 개입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코즈 이론과 유사하지만, 형평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코즈 이론과 차별화 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5개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린달의 자발적 협상모형에서 공공재의 개인별 조세가격, 자발적 합의, 사무엘슨 효율조건을 연결하고 코즈 정리와 혼동하지 않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정리

린달 모형은 공공재에 대해 각 개인이 얻는 한계편익에 맞는 개인별 조세가격을 부담하고, 모두가 공공재 공급량과 비용분담에 합의하는 자발적 교환 모형이다. 개인별 한계대체율의 합이 공공재의 한계변환율과 같아지는 린달 균형은 사무엘슨의 공공재 효율조건을 충족한다.

진술 1 X: 부정적 외부성을 당사자 간 협상으로 해결한다는 설명은 코즈 정리에 해당한다. 올바르게는 린달 모형은 공공재의 공급량과 개인별 비용부담을 자발적 합의로 결정하는 이론이다.
진술 2 X: 린달 모형은 개인들의 자발적 합의와 선호 표출을 전제로 하므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정책적 함의로 삼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개인별 조세가격을 통한 자발적 비용분담과 합의를 강조한다.
진술 3 O: 각 개인이 자신의 조세가격에서 공공재 수요를 선택하고 조세가격의 합이 공공재 한 단위의 비용과 같아지면, 개인별 한계대체율의 합이 한계변환율과 같아져 사무엘슨의 효율조건을 만족한다.
진술 4 O: 합의된 개인별 비용부담비율은 공공재에 대한 개인별 가격인 조세가격으로 작용하므로 시장가격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
진술 5 X: 린달 모형과 코즈 정리를 구분하는 핵심을 형평성 강조 여부로 볼 수 없다. 올바르게는 린달 모형은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과 비용분담을, 코즈 정리는 명확한 재산권과 낮은 거래비용 아래 외부성의 협상 해결을 설명한다. 따라서 옳은 진술은 3과 4의 2개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옳은 진술은 2개이므로 '0개'는 틀리며, 올바르게는 '2개'이다.
② X: 옳은 진술은 2개이므로 '1개'는 틀리며, 올바르게는 '2개'이다.
③ O: 진술 3과 4가 옳으므로 '2개'가 맞다.
④ X: 옳은 진술은 2개이므로 '3개'는 틀리며, 올바르게는 '2개'이다.
⑤ X: 옳은 진술은 2개이므로 '5개'는 틀리며, 올바르게는 '2개'이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자발적 협상'이라는 공통 표현만 보고 린달 모형을 코즈 정리와 동일시하기 쉽다. 부정적 외부성의 당사자 협상은 코즈 정리이고, 공공재의 개인별 조세가격과 비용분담 합의는 린달 모형이다. 또한 린달 모형의 핵심은 형평성보다 효율적 공공재 공급에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린달이 나오면 '공공재—개인별 조세가격—자발적 비용분담—사무엘슨 효율조건'의 연결을 확인한다. 외부성, 재산권, 거래비용, 당사자 협상이 중심이면 코즈 정리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린달은 공공재의 맞춤형 조세가격, 코즈는 외부성의 재산권 협상이다.

NoteBase

문 10. 어느 나라의 소득세 과세구간은 n개이고, 각 과세구간의 한계세수당 한계효용의 비율은 다음과 같았다. $\frac{MU_1}{MR_1} < \frac{MU_2}{MR_2} = \frac{MU_3}{MR_3} = \cdots = \frac{MU_{n-1}}{MR_{n-1}} < \frac{MU_n}{MR_n}$ (여기서 MR (한계세수)과 MU(한계효용)는 각각 0보다 크고, 체감한다.)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세율 조정방안은? (단, 소비는 세후소득에만 의존하고, 각 구간에서 효용은 소비의 함수, 세수는 세율의 함수이다.)

① 1번째 과세구간의 소득세율은 높이고, n번째 과세구간의 소득세율도 높인다.

② 1번째 과세구간의 소득세율은 높이고, n번째 과세구간의 소득세율은 낮춘다.

③ 1번째 과세구간의 소득세율은 낮추고, n번째 과세구간의 소득세율은 높인다.

④ 1번째 과세구간의 소득세율은 낮추고, n번째 과세구간의 소득세율도 낮춘다.

⑤ 현재 상태에서 세율조정은 불필요하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세율 조정으로 과세구간별 한계세수당 한계효용의 비율을 같게 만드는 효용극대화 조건을 묻는다.

조건 정리

현재 $\frac{MU_1}{MR_1}$은 가장 작고, $\frac{MU_n}{MR_n}$은 가장 크다. 중간 과세구간들의 비율은 서로 같지만, 모든 과세구간의 비율이 같지는 않다. 따라서 1번째 구간에서 세수를 더 확보하고 n번째 구간에서 세수를 덜 확보하는 방향으로 세 부담을 옮길 수 있다.

사용할 공식

효용극대화의 한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frac{MU_1}{MR_1} = \frac{MU_2}{MR_2} = \cdots = \frac{MU_n}{MR_n}$$

이 비율은 세수 1단위를 확보할 때 수반되는 한계효용의 크기를 비교하는 기준이다. 비율이 낮은 구간에서 세수를 늘리고 비율이 높은 구간에서 세수를 줄이면 같은 세수를 유지하면서 효용손실을 줄일 수 있다.

계산 과정

1. 1번째 구간은 $\frac{MU_1}{MR_1}$이 가장 작으므로 세율을 높여 세수를 더 확보한다.
2. n번째 구간은 $\frac{MU_n}{MR_n}$이 가장 크므로 세율을 낮춰 세수를 덜 확보한다.
3. 이 조정은 낮은 한계효용 비용의 구간으로 세 부담을 옮겨 과세구간별 비율이 같아지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1번째 과세구간의 세율을 높이는 방향은 맞지만, n번째 과세구간의 세율도 높이면 가장 큰 한계효용 비용을 지닌 구간의 부담까지 늘어난다. 틀린 표현은 ‘n번째 과세구간의 소득세율도 높인다’이며, 올바르게는 ‘n번째 과세구간의 소득세율은 낮춘다’이다.
② O — 비율이 가장 낮은 1번째 구간의 세율은 높이고, 비율이 가장 높은 n번째 구간의 세율은 낮추면 비율의 격차가 줄어 효용극대화 조건에 가까워진다.
③ X — 세율 조정 방향을 두 구간 모두 반대로 제시하였다. 틀린 표현은 ‘1번째 과세구간의 소득세율은 낮추고, n번째 과세구간의 소득세율은 높인다’이며, 올바르게는 ‘1번째 과세구간의 소득세율은 높이고, n번째 과세구간의 소득세율은 낮춘다’이다.
④ X — n번째 과세구간의 세율을 낮추는 방향은 맞지만, 1번째 과세구간의 세율까지 낮추면 비율이 낮은 구간에서 세수를 더 확보하지 못한다. 틀린 표현은 ‘1번째 과세구간의 소득세율은 낮춘다’이며, 올바르게는 ‘1번째 과세구간의 소득세율은 높인다’이다.
⑤ X — 현재는 1번째 구간과 n번째 구간의 비율이 서로 달라 효용극대화의 한계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세율조정은 불필요하다’이며, 올바르게는 ‘1번째 구간의 세율을 높이고 n번째 구간의 세율을 낮추는 조정이 필요하다’이다.

오답 포인트

한계세수당 한계효용의 비율이 큰 구간에 세금을 더 부과해야 한다고 거꾸로 판단하기 쉽다. 이 비율은 세수 1단위를 얻을 때의 한계효용 비용이므로, 비율이 낮은 구간의 세율을 높이고 비율이 높은 구간의 세율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과세구간별 *MU*/*MR*을 비교한다. 가장 작은 구간은 세율을 높이고 가장 큰 구간은 세율을 낮추며, 모든 구간의 비율이 같아지는 방향을 선택한다.

암기 포인트

MU/*MR*이 낮으면 세율을 올리고, 높으면 세율을 내린다. 최적점에서는 모든 과세구간의 *MU*/*MR*이 같다.

NoteBase

문 11. 오염의 효율적 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오염의 최적 수준은 오염감축의 사회적 한계비용이 오염의 사회적 한계피해와 같아지는 점에서 결정된다.

② 오염 발생 기업에 대한 과세는 오염 감축기술의 개발을 저해한다.

③ 오염은 기업 간 오염 감축비용을 고려하여 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④ 재산권 설정과 거래를 통해 오염의 최적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

⑤ 오염에 대한 과세는 기업들이 스스로 오염을 억제할 유인을 준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효율적인 오염 억제의 조건과 오염세·재산권 방식이 기업의 오염 감축 유인에 미치는 효과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효율적인 오염 수준은 오염을 한 단위 더 줄이는 사회적 한계비용과 그로 인해 줄어드는 사회적 한계피해가 같아지는 수준이다. 오염세는 배출에 가격을 부과하여 기업이 감축과 세금 납부 중 비용이 작은 쪽을 선택하게 하고, 감축기술을 개발할 지속적인 유인을 제공한다. 재산권을 명확히 설정하고 거래할 수 있게 하면 거래비용이 없는 등의 조건에서 당사자 간 협상으로 효율적인 오염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 오염을 추가로 감축할 때 드는 사회적 한계비용과 그 감축으로 피하는 사회적 한계피해가 같을 때 순사회편익이 극대화된다.
② X — 틀린 표현은 '오염 감축기술의 개발을 저해한다'이다. 오염세가 부과되면 배출량을 줄일수록 세금 부담도 줄어들므로 기업에는 더 저렴한 감축기술을 개발·도입할 유인이 생긴다. 올바르게는 '오염 발생 기업에 대한 과세는 오염 감축기술의 개발을 촉진한다'이다.
③ O — 기업마다 오염을 줄이는 비용이 다르므로 기업 간 한계감축비용을 같게 되도록 감축량을 배분해야 동일한 총감축량을 최소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다.
④ O — 재산권이 명확하고 거래비용이 없거나 충분히 작다는 조건에서는 오염 권리의 거래와 협상을 통해 효율적인 오염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⑤ O — 오염세는 배출 한 단위마다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기업이 세금과 한계감축비용을 비교하여 스스로 오염을 줄이게 한다.

오답 포인트

②는 과세가 기업 비용을 높인다는 사실을 기술개발 유인 저하로 잘못 연결한다. 배출할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하는 방식에서는 감축기술이 개선될수록 세금과 감축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기술혁신 유인이 커진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오염 억제 수단은 효율성과 유인을 나누어 판단한다. 효율적인 오염 수준은 사회적 한계감축비용과 사회적 한계피해의 일치, 비용효율적인 기업별 배분은 한계감축비용의 일치, 오염세의 동태적 효과는 감축과 기술혁신 유인의 제공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최적 오염은 한계감축비용과 한계피해의 일치, 오염세는 감축과 기술혁신의 유인이다.

NoteBase

문 12. 정부가 정량보조의 형태로 소규모 임대아파트를 지역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경제적 효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무주택자의 입장에서는 정액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에 비해 후생면에서 더 우월하다.
ㄴ. 대형평수 주택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정액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에 비해 후생면에서 더 열등하다.
ㄷ. 식품을 정량보조로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소규모 임대아파트의 정량보조와 같은 금액의 정액 임대료 지원이 수혜자의 선택 가능성과 후생에 미치는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정량보조는 정부가 정해진 종류와 수량의 재화를 현물로 제공하는 방식이므로 수혜자의 선택을 제한한다.
정액 임대료 지원은 일정액을 지원하면서 주거 규모와 조합을 수혜자가 선택하게 하므로, 같은 비용이라면 수혜자는 적어도 현물로 제공된 소규모 아파트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량보조가 정액지원보다 후생이 더 높아지지는 않으며, 현물의 규모가 수혜자의 선호와 맞지 않으면 후생이 더 낮아진다.
주택은 식품처럼 제공량에 자신의 구매량을 조금씩 보태어 동일한 재화를 연속적으로 소비하기 어렵다는 점도 중요하다. 소규모 아파트와 대형 주택을 합쳐 하나의 더 큰 주택처럼 소비할 수 없으므로 식품 정량보조와 효과가 동일하지 않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은 틀리다. 정액 임대료 지원에서는 무주택자도 소규모 임대아파트에 해당하는 주거를 선택할 수 있으면서 다른 주거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선택이 제한된 정량보조가 후생상 더 우월하지 않다. '더 우월하다'는 표현은 '같거나 더 열등하다'로 고쳐야 한다. 따라서 옳은 항목은 ㄱ이 아니라 ㄴ이다.

② O
ㄴ은 옳다. 대형평수 주택을 선호하거나 이미 보유한 사람에게 소규모 임대아파트는 선호와 맞지 않는 현물이므로 활용 가치가 낮다. 같은 금액의 정액 임대료 지원은 주거 선택의 폭을 넓히므로 정량보조의 후생이 더 열등하다. 옳은 항목은 ㄴ뿐이다.

③ X
ㄴ은 옳지만 ㄱ이 틀리다. 정량보조는 무주택자의 선택 범위를 넓히는 정액지원보다 후생상 더 우월할 수 없다. 'ㄱ, ㄴ'은 'ㄴ'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ㄴ은 옳지만 ㄷ이 틀리다. 주택은 식품처럼 제공량과 추가 구매량을 연속적으로 합쳐 소비하기 어려우므로 두 정량보조의 효과는 동일하지 않다. 'ㄴ, ㄷ'은 'ㄴ'으로 고쳐야 한다.

⑤ X
ㄱ과 ㄷ이 틀리고 ㄴ만 옳다. 정량보조가 정액지원보다 후생상 더 우월하다는 ㄱ의 표현과 식품 정량보조와 효과가 동일하다는 ㄷ의 표현이 모두 잘못되었다. 'ㄱ, ㄴ, ㄷ'은 'ㄴ'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무상 제공이라는 말만 보고 정량보조의 후생이 더 크다고 판단하기 쉽다. 비교의 핵심은 무상 여부가 아니라 같은 재정비용에서 수혜자가 원하는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지이다. 또한 모든 현물보조가 식품보조처럼 작동한다고 보면 안 된다. 주택은 제공된 소형 주택에 추가 주택을 결합하여 원하는 규모로 조정하기 어려운 재화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같은 금액의 정량보조와 정액지원을 비교하면 먼저 정액지원의 선택집합이 더 넓은지를 본다. 현물로 받은 양이 원래 선택할 양보다 많거나 재화를 나누어 보충할 수 없으면 현물보조가 선택을 구속하여 후생이 더 낮아진다.

암기 포인트

같은 비용이면 선택권이 넓은 정액지원이 약우위이고, 결합하기 어려운 주택의 정량보조는 식품 정량보조와 다르게 작동한다.

NoteBase

문 13.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는 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하면 실직 시 일정기간 실업급여로 지급하게 된다. 이의 경제적 효과로 옳은 것은?

① 구직활동을 하지 않게 한다.

② 자발적 실업자에게도 지급된다.

③ 도덕적 해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④ 경기가 좋아지면 실업급여의 지급이 늘어난다.

⑤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구직노력을 덜 하게 하는 유인이 발생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고용보험의 실업급여가 구직 유인과 경기 변동에 미치는 효과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소득을 보전하여 생활을 안정시키는 한편, 실업 상태를 유지할 때의 비용을 낮춰 구직노력을 줄이거나 실업기간을 늘리는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다. 소득대체율은 실직 전 임금 가운데 실업급여로 보전되는 비율이며, 이 비율이 높을수록 취업과 실업 상태 사이의 소득 차이가 작아진다. 또한 실업급여 지출은 실업이 늘어나는 불황기에 증가하고 실업이 줄어드는 호황기에 감소하는 자동안정화 기능을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구직활동을 전혀 하지 않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며, 경제적 유인 측면에서는 구직노력을 줄이거나 실업기간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
틀린 표현: '구직활동을 하지 않게 한다.'
올바른 표현: '구직노력을 줄이거나 구직기간을 늘릴 유인을 발생시킬 수 있다.'

② X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정당하고 불가피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자발적 실업자에게 일반적으로 지급된다는 표현은 틀리다.
틀린 표현: '자발적 실업자에게도 지급된다.'
올바른 표현: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되며, 정당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자는 예외적으로 수급할 수 있다.'

③ X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얻는 소득을 높여 구직노력을 줄이거나 실업기간을 늘릴 유인을 만들 수 있으므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틀린 표현: '도덕적 해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올바른 표현: '구직노력 감소와 같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④ X
경기가 좋아지면 일반적으로 실업이 감소하므로 실업급여 지급도 줄어든다. 반대로 불황기에는 실업자가 늘어 지급이 증가한다.
틀린 표현: '경기가 좋아지면 실업급여의 지급이 늘어난다.'
올바른 표현: '경기가 나빠져 실업이 늘면 실업급여 지급이 증가한다.'

⑤ O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면 실업 상태에서 보전받는 소득이 커져 취업을 통해 얻는 순편익이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따라서 구직노력을 덜 하거나 더 좋은 일자리를 기다리며 실업기간을 늘릴 유인이 발생한다.

오답 포인트

①의 '구직활동을 하지 않게 한다'와 ③의 '도덕적 해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모두 지나친 단정이다. 실업급여의 핵심 부작용은 구직활동의 완전한 중단이 아니라 구직노력 감소와 실업기간 연장 가능성이다. ④에서는 실업급여 지출이 경기와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실업급여가 커질수록 실업 상태의 기회비용은 낮아지고 구직 유인은 약해진다고 판단한다. 경기와의 관계에서는 ‘불황 → 실업 증가 → 급여 지출 증가’, ‘호황 → 실업 감소 → 급여 지출 감소’의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소득대체율 상승 → 실업 상태의 소득 보전 확대 → 구직노력 감소 유인. 실업급여 지출은 불황기에 늘어나는 자동안정장치이다.

NoteBase

문 14.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소득세 과세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부의 소득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T = (Y-1000) \times 0.3 \quad (T\text{는 세액, } Y\text{는 소득})$$

① 평균세율보다 한계세율이 항상 높다.

② 비례세에 비해 수직적 형평성을 개선하고 있다.

③ 소득공제액은 1000이다.

④ 세액공제액은 300이다.

⑤ 누진세 체계를 가지고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주어진 소득세 함수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구별하고, 평균세율과 한계세율을 비교하여 누진성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세액은 $T = (Y - 1000) \times 0.3$으로 주어진다. 부의 소득세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실제 세액은 $T = \max\{0, 0.3(Y - 1000)\}$이다. 따라서 $Y < 1000$에서는 세액, 평균세율, 한계세율이 모두 0이고, $Y = 1000$에서는 세액과 평균세율은 0이지만 조세함수의 미분 가능한 한계세율은 정의되지 않는다. $Y > 1000$인 과세구간의 한계세율은 0.3이다. 공식 채점은 세율 비교에 관한 선지를 이 과세구간에 한정하여 해석한 것이다.

사용할 공식

평균세율은 $ATR = T/Y$, 한계세율은 $MTR = dT/dY$이다. 과세구간에서는 $T = 0.3Y - 300$이므로 $ATR = 0.3 - 300/Y$, $MTR = 0.3$이다. 평균세율이 소득 증가에 따라 상승하면 누진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과세표준은 소득 Y에서 1000을 뺀 $Y-1000$이므로 소득공제액은 1000이다.
2. 과세구간에서 $ATR = 0.3 - 300/Y < 0.3 = MTR$이다.
3. 소득이 증가하면 $300/Y$가 작아져 평균세율이 0.3에 가까워지므로 평균세율은 상승한다. 따라서 이 체계는 누진세이다.
4. 식을 전개할 때 나타나는 300은 1000×0.3으로 계산되는 소득공제의 세 부담 감소 효과이다. 별도의 세액공제액을 뜻하지 않는다.

선지 판단

① O. 공식 채점은 $Y > 1000$인 과세구간을 전제로 한다. 이 구간에서 평균세율은 $0.3 - 300/Y$, 한계세율은 0.3이므로 한계세율이 평균세율보다 높다. 다만 실제 세액을 0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해석하면 $Y < 1000$에서는 두 세율이 모두 0이므로, 전 소득구간을 포함한 '항상'이라는 표현은 엄밀하지 않다.
② O. 비례세는 평균세율이 일정하지만 이 체계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세율이 상승한다. 담세력이 큰 사람에게 더 높은 평균세율을 적용하므로 비례세보다 수직적 형평성을 개선한다.
③ O. 과세표준이 $Y-1000$이므로 소득에서 먼저 빼는 소득공제액은 1000이다.
④ X. '세액공제액은 300이다'가 틀렸다. 300은 $T = 0.3Y - 300$으로 전개할 때 나타나는 소득공제 1000의 세 부담 감소액이며, 별도로 주어진 세액공제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소득공제액 1000에 따른 세 부담 감소액은 300이다'라고 해야 한다.
⑤ O. 과세구간의 한계세율은 일정하지만 평균세율은 소득과 함께 상승하므로 누진세 체계이다.

오답 포인트

$T = 0.3Y - 300$의 상수항 -300만 보고 이를 세액공제라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원래 식은 소득에서 1000을 먼저 빼고 세율을 곱하는 구조이므로 1000은 소득공제이고, 300은 그 소득공제가 만든 세 부담 감소액이다. 또한 누진세 여부는 한계세율의 상승만이 아니라 평균세율의 상승으로 판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괄호 안에서 소득을 차감한 뒤 세율을 곱하면 소득공제이고, 세율을 곱해 산출한 세액에서 금액을 별도로 차감하면 세액공제이다. 세율 구조의 누진성은 $ATR = T/Y$를 구해 소득 증가에 따라 상승하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과세표준 전 차감은 소득공제, 산출세액 후 차감은 세액공제이다. $MTR > ATR$이면 평균세율이 상승하는 누진구조이다.

NoteBase

문 15. 소득구간별 세율이 아래와 같을 때, 연금저축에 대하여 4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지던 것이 400만원까지에 대하여 10%의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고 가정할 경우의 효과로 옳은 것은?

구 분	세 율
저소득층	5 %
중소득층	15 %
고소득층	30 %

① 중소득자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② 저소득층의 연금저축이 감소할 것이다.

③ 저축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게 같은 금액의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④ 고소득층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더 감소한다.

⑤ 소득분배 개선 효과는 없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므로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혜택이 커지는 반면,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직접 빼므로 같은 저축액에는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비교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저소득층·중소득층·고소득층의 세율은 각각 5%, 15%, 30%이다. 공제 대상 저축액은 최대 400만원이며, 제도는 소득공제에서 10% 세액공제로 바뀐다. 저축액 중 공제 대상 금액을 S, 한계세율을 t라 한다.

사용할 공식

소득공제 혜택: B_소득공제=S× t
세액공제 혜택: B_세액공제=S× 10\%

소득공제는 줄어든 과세표준에 한계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이 감소하고, 세액공제는 공제 대상 저축액의 10%만큼 세금이 직접 감소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공제 한도인 400만원을 저축했다고 보면 종전 혜택은 저소득층 20만원, 중소득층 60만원, 고소득층 120만원이다. 전환 후 혜택은 세 계층 모두 40만원이다. 따라서 혜택의 변화는 저소득층 +20만원, 중소득층 -20만원, 고소득층 -80만원이다. 400만원 미만을 저축해도 각 금액에 동일한 세율 차이를 곱하므로 고소득층의 혜택 감소폭이 가장 크다는 결론은 같다.

선지 판단

① X — 중소득층은 종전 15% 상당의 혜택에서 10% 세액공제로 바뀌므로 혜택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한다. 틀린 표현 '상대적으로 증가한다'는 '상대적으로 감소한다'로 고쳐야 한다.
② X — 저소득층은 공제율이 실질적으로 5%에서 10%로 높아져 연금저축 유인이 커진다. 틀린 표현 '연금저축이 감소할 것이다'는 '연금저축이 증가할 유인이 생긴다'로 고쳐야 한다.
③ X — 세액공제액은 실제 저축액의 10%이므로 저축금액이 다르면 혜택도 다르다. 틀린 표현 '저축금액에 관계없이'는 '같은 금액을 저축한 경우 계층에 관계없이'로 고쳐야 하며, 400만원 이상 저축하면 한도 때문에 모두 40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④ O — 고소득층은 적용 비율이 30%에서 10%로 20%p 낮아지므로, 15%에서 10%로 5%p 낮아지는 중소득층보다 혜택 감소폭이 크다.
⑤ X — 저소득층의 혜택은 늘고 고소득층의 혜택은 크게 줄어 세제혜택의 역진성이 완화된다. 틀린 표현 '소득분배 개선 효과는 없다'는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있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같은 저축액이면 계층별 공제액이 같다'와 '저축액이 달라도 공제액이 같다'를 혼동하게 한다. 또한 ①은 중소득층의 혜택이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해졌다는 말과 중소득층 자신의 혜택이 증가했다는 말을 혼동하게 한다. 중소득층의 혜택 자체는 15%에서 10%로 감소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소득공제는 '공제 대상 금액 × 한계세율', 세액공제는 '공제 대상 금액 × 세액공제율'로 계산한 뒤 계층별 전후 차이를 비교한다. 같은 세액공제율로 전환되면 기존 한계세율이 높은 계층일수록 혜택 감소폭이 커진다.

암기 포인트

소득공제는 고세율자에게 유리하고, 정률 세액공제는 같은 저축액에 같은 혜택을 준다.

NoteBase

문 16. 램지(Ramsey)의 최적물품과세원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초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② 과세 시 모든 상품의 소비량 감소율이 같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③ 재화 간 세수에 대한 후생비용의 비율이 같아야 한다.

④ 필수재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재화일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램지의 최적물품과세원리와 역탄력성 규칙을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램지의 최적물품과세원리는 일정한 조세수입을 확보하면서 조세로 인한 초과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상품별 세율을 정하는 원리이다. 단순한 역탄력성 규칙에서는 수요의 가격탄력성 절댓값이 작은 재화에 높은 세율을, 큰 재화에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는 과세로 인한 각 상품의 보상수요 감소율을 같게 하고, 재화 사이의 한계후생비용 대비 추가 세수의 관계를 균등하게 만드는 방향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램지 과세는 필요한 세수를 거두는 제약 아래 물품세가 만드는 초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② O — 램지 규칙은 과세로 인한 모든 상품의 보상수요 감소율이 같아지도록 세율을 설계한다는 비례감소 원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③ O — 최적점에서는 각 재화에서 세수를 한 단위 더 확보할 때 발생하는 한계후생비용이 같아야 한다. 한 재화의 한계후생비용이 더 크다면 과세를 다른 재화로 옮겨 총후생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④ O — 다른 재화와의 교차효과를 배제한 단순한 역탄력성 규칙에서는 필수재의 수요가 대체로 가격에 덜 민감하므로 더 높은 세율이 배정된다. 이는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한 결론이며 형평성까지 반영한 결론은 아니다.
⑤ X — 틀린 표현은 '가격탄력성이 높은 재화일수록 높은 세율'이다. 올바르게는 수요의 가격탄력성 절댓값이 낮은 재화일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가격탄력성 절댓값이 높은 재화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세율을 높이면 세수가 커진다는 직관 때문에 탄력성이 큰 재화에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탄력성이 큰 재화는 같은 세율에도 수요량이 크게 줄어 초과부담이 커지므로 램지 규칙은 반대로 세율을 낮춘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램지 과세가 나오면 먼저 '주어진 세수 아래 초과부담 최소화'를 떠올리고, 단순한 역탄력성 규칙에서는 가격탄력성 절댓값과 세율이 반대 방향인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램지 과세는 저탄력 재화에 고세율, 고탄력 재화에 저세율이다.

NoteBase

문 17. 두 사람(A, B)만 존재하고 X재의 양은 1000이고, A와 B의 효용함수는 각각 $3\sqrt{X_a}$, $\sqrt{X_b}$이다.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의 형태를 가질 경우 사회후생의 극대값은? (단, X_a는 A의 소비량이고, X_b는 B의 소비량이며, X_a와 X_b는 모두 양의 수이다.)

① 60

② 70

③ 80

④ 90

⑤ 100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는 개인 효용의 합이므로, 한계효용이 같아지는 자원배분을 구한 뒤 그때의 사회후생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X재의 총량은 1000이고, 사회후생함수는 $W = 3\sqrt{X_a} + \sqrt{X_b}$이다. 두 사람의 효용이 모두 소비량에 따라 증가하므로 사회후생 극대점에서는 자원을 모두 배분하여 $X_a + X_b = 1000$이 성립한다. 또한 X_a와 X_b는 모두 양수이다.

사용할 공식

내부해에서는 두 사람에게 X재를 한 단위 더 배분할 때의 한계효용이 같아야 한다. 따라서 다음 조건을 사용한다.
$\frac{3}{2\sqrt{X_a}} = \frac{1}{2\sqrt{X_b}}$
효용함수가 오목하므로 이 일계조건과 자원제약을 만족하는 배분에서 사회후생이 극대화된다.

계산 과정

1. 한계효용 일치 조건을 정리하면 $3\sqrt{X_b} = \sqrt{X_a}$이다.
2. 양변을 제곱하면 $X_a = 9X_b$이다.
3. 자원제약에 대입하면 $9X_b + X_b = 1000$이므로 $X_b = 100$, $X_a = 900$이다.
4. 이를 사회후생함수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W = 3\sqrt{900} + \sqrt{100} = 3 \times 30 + 10 = 100$
따라서 사회후생의 극대값은 100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사회후생의 극대값은 100이므로 60은 틀린 값이다. 올바르게는 100이다.
② X — 사회후생의 극대값은 100이므로 70은 틀린 값이다. 올바르게는 100이다.
③ X — 사회후생의 극대값은 100이므로 80은 틀린 값이다. 올바르게는 100이다.
④ X — 두 사람에게 500씩 동일하게 배분하면 사회후생은 $4\sqrt{500} \approx 89.44$로 90에 가깝지만, 이는 한계효용을 같게 하는 배분이 아니므로 극대값이 아니다. 90은 틀린 값이고 올바르게는 100이다.
⑤ O — $X_a = 900$, $X_b = 100$일 때 사회후생이 100으로 극대화되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효용함수에서 A의 계수가 3이라고 해서 소비량을 3 대 1로 배분하거나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배분하면 안 된다. 한계효용 조건에서 제곱근을 정리하면 소비량의 비율은 $X_a : X_b = 9 : 1$이 된다. 특히 ④의 90은 균등배분에서 얻는 약 89.44를 반올림한 값에 가깝지만, 균등배분은 최적배분이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리주의 사회후생 극대화 문제에서는 개인 효용을 합하고, 자원제약 아래 한계효용을 일치시켜 최적 배분을 구한 다음, 그 배분을 사회후생함수에 다시 대입한다.

암기 포인트

효용의 합을 극대화하는 내부해는 한계효용 일치가 기준이다. $3\sqrt{X_b} = \sqrt{X_a}$이면 소비량 비율은 3 대 1이 아니라 9 대 1이다.

NoteBase

문 18. 파레토최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산자 간 생산요소 배분의 효율성은 모든 생산요소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면 달성된다.

② 소비자 간 재화 배분의 효율성은 모든 상품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면 달성된다.

③ 시장경제에서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가 완전경쟁상태에 있다면, 강단조성을 갖는 동시에 외부성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파레토효율이 이루어진다.

④ 파레토최적 배분상태는 효용가능경계곡선 상에서 하나만 나타난다.

⑤ 재화의 최적구성은 생산에 있어서 두 재화 간 한계변환율과 소비에 있어서 두 재화 간 한계대체율이 같을 때 이루어진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파레토최적의 세 가지 효율성 조건과 효용가능경계곡선의 의미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파레토최적은 어느 한 사람의 효용을 낮추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효용을 더 높일 수 없는 배분상태이다. 소비의 효율성은 소비자들의 한계대체율이 같을 때, 생산의 효율성은 생산자들의 한계기술대체율이 같을 때, 생산물 구성의 효율성은 한계변환율과 한계대체율이 같을 때 성립한다. 효용가능경계곡선은 이러한 파레토효율적 효용 조합들을 이은 경계이므로, 일반적으로 하나의 점이 아니라 곡선 위의 여러 점이 파레토최적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모든 생산요소시장이 완전경쟁적이면 각 생산자는 동일한 요소가격비율에 맞추어 비용을 최소화한다. 따라서 생산자들의 한계기술대체율이 서로 같아져 생산요소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② O — 모든 상품시장이 완전경쟁적이면 소비자들은 동일한 시장가격비율에 맞추어 효용을 극대화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한계대체율이 서로 같아져 소비자 간 재화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③ O — 강단조적 선호 아래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격수용자로 행동하고 외부성 등 시장실패 요인이 없다면, 경쟁균형은 소비·생산·생산물 구성의 효율성 조건을 충족하여 파레토효율적이다. 이는 후생경제학 제1정리의 내용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효용가능경계곡선 상에서 하나만 나타난다'이다. 효용가능경계곡선 위의 각 점은 한 사람의 효용을 더 높이려면 다른 사람의 효용을 낮춰야 하는 파레토최적 배분을 나타내므로, 올바르게는 '파레토최적 배분상태는 효용가능경계곡선 상에서 여러 개 나타날 수 있다'이다.
⑤ O — 생산가능경계에서 두 재화 사이의 한계변환율과 소비자의 한계대체율이 같아야 생산되는 재화의 구성과 소비자가 원하는 재화의 구성이 일치하므로 재화의 최적구성이 달성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는 '효율적 배분'과 '유일한 배분'을 혼동하게 만든다. 효용가능경계곡선 위의 점들은 모두 파레토효율적이지만 소득분배와 효용 배분은 서로 다르므로, 파레토 기준만으로 그중 하나를 유일하게 선택할 수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소비 효율성은 소비자 간 한계대체율의 일치, 생산 효율성은 생산자 간 한계기술대체율의 일치, 생산물 구성 효율성은 한계변환율과 한계대체율의 일치로 판단한다. 효용가능경계곡선에서는 '곡선 위는 파레토효율, 곡선 안쪽은 개선 가능'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소비는 한계대체율끼리, 생산은 한계기술대체율끼리, 최적구성은 한계변환율과 한계대체율을 같게 한다.
효용가능경계곡선 위에는 파레토최적점이 여러 개 존재한다.

NoteBase

문 19.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누진세 구조의 개인소득세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직접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나타낸다.

② 소비세의 과세대상을 사치품으로 한정하여 부과한다면 고소득층이 세금부담을 주로 할 것이므로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나타낸다.

③ 한계세율이 점증하는 누진소득세 체계에서 소득공제를 도입하면 고소득층의 세후 소득을 감소시킨다.

④ 법인세의 세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면 소득분배가 악화된다.

⑤ 자산소득 지니계수가 높은 나라에서는 자산소득에 높은 세율로 과세하면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나타낸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세율 구조, 과세 대상, 조세 귀착, 공제의 효과에 따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세금을 법률상 누가 내는지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어느 소득계층의 세후소득이 얼마나 변하는지로 판단한다. 누진소득세는 고소득층의 평균세부담률을 더 높여 세후소득 격차를 줄인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므로 세액을 줄이고 세후소득을 늘리며, 한계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같은 공제액에서 받는 세금 절감액이 크다.

선지별 해설

① O — 누진세 구조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평균세부담률이 높아져 세후소득의 격차가 줄어든다. 저소득층에 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더라도 상대적인 소득분배는 개선될 수 있다.
② O — 소비세의 과세 대상을 사치품으로 한정하면 사치품 소비 비중이 큰 고소득층이 주로 부담하므로 일반적인 소비세보다 누진적인 효과가 나타나 소득분배가 개선된다.
③ X — 틀린 표현은 '소득공제를 도입하면 고소득층의 세후소득을 감소시킨다'이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줄이므로 고소득층의 세후소득도 증가시킨다. 더욱이 한계세율이 점증하면 같은 금액을 공제하더라도 고소득층의 세금 절감액이 더 커질 수 있다.
④ O — 법인세 부담이 상품가격 상승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되면 소득 중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저소득층의 상대적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소득분배가 악화된다.
⑤ O — 자산소득 지니계수가 높다는 것은 자산소득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 자산소득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 집중된 세후 자산소득을 줄여 소득분배를 개선할 수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누진세이므로 고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일반 원칙과 '소득공제를 새로 도입한다'는 변화를 섞은 선지이다. 누진세 자체는 재분배를 강화하지만, 소득공제의 도입은 세금을 줄여 세후소득을 증가시키며 높은 한계세율에서는 공제 혜택도 더 커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제도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늘리는지 줄이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최종 세부담이 어느 소득계층에 귀착되는지를 판단한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감소, 세액 감소, 세후소득 증가의 순서로 연결된다.

암기 포인트

누진세는 격차를 줄이고, 소득공제는 세금을 줄인다. 같은 소득공제라면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절세액이 크다.

NoteBase

문 20. 공적연금보험제도 도입이 민간저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① 노후대비에 대한 인식이 더욱 제고되어 민간저축은 증가한다.

②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개인의 가처분소득 감소로 민간저축은 감소한다.

③ 평생에 걸친 소비의 현재가치는 소득의 현재가치와 같다는 조건 하에서 자산대체효과는 민간저축을 감소시킨다.

④ 상속효과에 따르면 민간저축은 증가할 것이다.

⑤ 공적연금보험제도의 실시로 발생하는 은퇴효과는 민간저축을 감소시킨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공적연금 도입이 민간저축에 미치는 여러 경로를 증가 효과와 감소 효과로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공적연금은 노후소득을 대신 마련해 주는 자산대체효과와 보험료 납부에 따른 가처분소득 감소를 통해 민간저축을 줄일 수 있다. 반면 노후대비 인식 제고, 자녀의 부담을 보전하려는 상속효과, 조기 은퇴로 길어진 은퇴기간에 대비하는 은퇴효과는 민간저축을 늘릴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공적연금 도입으로 노후대비의 필요성을 더 분명히 인식하면 스스로 준비하려는 민간저축이 증가할 수 있다.
② O.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현재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므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민간저축 여력도 감소한다.
③ O. 자산대체효과는 장래에 받을 공적연금 급여를 노후자산의 일부로 보고 그만큼 사적 자산의 축적을 줄이는 효과이므로 민간저축을 감소시킨다.
④ O. 상속효과는 현 세대가 공적연금으로 인해 미래 세대가 부담할 비용을 보전하려고 상속을 늘리는 과정에서 민간저축을 증가시키는 효과이다.
⑤ X. 틀린 표현은 '은퇴효과는 민간저축을 감소시킨다'이다. 공적연금이 조기 은퇴를 유도하면 근로기간은 짧아지고 은퇴기간은 길어지므로 이에 대비한 민간저축은 증가한다. 올바르게는 '공적연금보험제도의 실시로 발생하는 은퇴효과는 민간저축을 증가시킨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공적연금이 노후소득을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효과가 민간저축을 줄인다고 보면 ⑤를 놓치기 쉽다. ③의 자산대체효과는 저축 감소, ⑤의 은퇴효과는 조기 은퇴와 은퇴기간 연장에 대비한 저축 증가라는 방향 차이가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적연금 급여가 사적 노후자산을 대신하거나 보험료가 현재 소득을 줄이는 경로는 민간저축 감소로 판단한다. 노후대비 인식을 높이거나 상속을 늘리거나 은퇴기간을 길게 만드는 경로는 민간저축 증가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자산대체·가처분소득 감소는 저축 감소, 인식 제고·상속·은퇴는 저축 증가이다.

NoteBase

문 21. 병원 방문의 수요곡선이 $400 - Q$(Q: 병원 방문 횟수)이고, 건강보험이 없는 상태의 방문당 비용은 100, 건강보험 가입 시 방문당 본인부담금은 20이다.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후생비용은?

① 3200
② 4000
③ 5000
④ 6000
⑤ 64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건강보험으로 본인부담금이 낮아질 때 늘어난 의료 이용량을 구하고, 그 과잉 이용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의 후생손실을 삼각형의 면적으로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수요곡선은 $P = 400 - Q$이다. 보험이 없을 때의 방문당 비용은 100이고, 보험 가입 후 본인부담금은 20이다. 실제 방문당 자원비용은 100이지만 소비자는 보험 가입 후 20만 부담하므로 의료 이용이 과도하게 증가한다.

사용할 공식

보험이 없을 때와 가입 후의 방문량은 각각 수요곡선에 가격 100과 본인부담금 20을 대입해 구한다. 후생비용은 과잉 방문 구간에서 실제 자원비용과 한계편익의 차이를 합한 값이므로 다음 삼각형의 면적이다.
후생비용=(1)/(2)×(과잉 방문량)×(자원비용-본인부담금)

계산 과정

1. 보험이 없을 때는 $100 = 400 - Q$이므로 $Q = 300$이다.
2. 보험 가입 후에는 $20 = 400 - Q$이므로 $Q = 380$이다.
3. 과잉 방문량은 $380 - 300 = 80$이고, 방문당 비용의 왜곡도 $100 - 20 = 80$이다.
4. 따라서 후생비용은 다음과 같다.

$$\frac{1}{2} \times 80 \times 80 = 3200$$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 계산한 후생비용 3200과 일치한다.
② X — 4000은 계산값과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값 4000이 아니라 올바른 후생비용은 3200이다.
③ X — 5000은 계산값과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값 5000이 아니라 올바른 후생비용은 3200이다.
④ X — 6000은 계산값과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값 6000이 아니라 올바른 후생비용은 3200이다.
⑤ X — 6400은 삼각형의 면적에서 1/2을 적용하지 않고 80 × 80으로 계산한 값이다. 틀린 값 6400이 아니라 올바른 후생비용은 3200이다.

오답 포인트

보험자가 지급하는 금액이나 소비자의 의료비 절감액을 후생비용으로 보면 안 된다. 후생손실은 보험 때문에 추가된 방문 중 한계편익이 실제 자원비용보다 낮은 부분의 면적이며, 수요곡선이 선형이므로 직사각형이 아니라 삼각형이다. 특히 ⑤의 6400은 1/2을 빠뜨린 값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보험 전 가격과 보험 후 본인부담금에 대응하는 수요량을 각각 구한다. 그다음 과잉 이용량과 가격 왜곡의 크기를 밑변과 높이로 삼아 선형 수요에서의 후생손실을 삼각형 면적으로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선형 수요에서 보험의 도덕적 해이로 생기는 후생손실은 1/2×과잉 이용량×가격 왜곡이다.

NoteBase

문 22.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인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가격을 한계비용과 같도록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 세원으로 손실을 충당한다.

② 공공서비스의 평균비용으로 공공서비스가격을 결정한다.

③ 소비자가 사용하는 양에 따라 다른 가격을 설정한다.

④ 소비자로 하여금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게 한 다음 소비자가 구입하는 양에 비례하여 추가적인 가격을 설정한다.

⑤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은 점을 공공서비스가격으로 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으로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공공서비스에서 한계비용가격설정이 만드는 적자를 보전하는 방법과, 가격·공급량의 결정 원리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한계비용가격설정은 가격을 추가 1단위 공급비용과 같게 하는 방식이다. 규모의 경제가 지속되는 구간에서는 $AC > MC$이므로 $P = MC$로 가격을 정하면 총수입이 총비용보다 작아져 적자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는 대표적 방식은 일반 세원 보조, 평균비용가격설정, 가격차별, 이부가격제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일반 세원으로 적자를 보전하면 이용가격을 한계비용 수준에 유지하면서 서비스 공급자의 손실을 충당할 수 있다.
② O — 가격을 평균비용과 같게 정하는 $P = AC$ 방식은 단위당 수입으로 평균비용을 회수하므로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아져 적자를 없앨 수 있다. 다만 $P > MC$가 되어 한계비용가격설정보다 공급량이 줄어든다.
③ O — 사용량에 따라 단가를 달리하는 가격차별 또는 블록요금은 수요자의 지불의사를 더 많이 회수하여 한계비용가격설정에서 생기는 적자를 보전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④ O — 이는 이부가격제이다. 고정요금으로 고정비용을 회수하고 사용량에 비례하는 종량요금으로 한계비용을 부담시키면 적자를 보전하면서 효율적인 사용량을 유도할 수 있다.
⑤ X — 틀린 표현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은 점을 공공서비스가격으로 한다'이다. $MR = MC$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공급량을 정하는 조건이지, 그 교점의 값을 곧바로 소비자 가격으로 정하는 조건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MR = MC$에서 공급량을 정한 뒤 그 공급량에 대응하는 수요곡선상의 가격을 부과한다. 이 방식은 독점적 가격설정 원리이며 한계비용가격설정의 적자를 보전하는 대표적 방식으로 제시된 네 가지 방법과 구별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⑤는 $MR = MC$라는 익숙한 조건을 '가격 결정 조건'처럼 표현한 것이 함정이다. 이 조건은 공급량을 정하고, 가격은 그 공급량에서 수요곡선을 통해 찾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적자의 원인이 $P = MC < AC$임을 확인한다. 그다음 선지가 세금으로 보전하는지, 가격을 평균비용까지 올리는지, 가격차별로 소비자잉여를 회수하는지, 고정요금과 종량요금을 결합하는지를 본다. $MR = MC$가 나오면 가격이 아니라 이윤극대화 공급량을 정하는 조건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한계비용가격의 적자 해법은 '세금 보조 · 평균비용가격 · 가격차별 · 이부가격'이고, $MR = MC$는 가격이 아니라 공급량 결정 조건이다.

NoteBase

문 23. 두 기업(A, B)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A기업은 X재를 생산하고, B기업은 Y재를 생산할 경우, A기업의 비용함수(C_a)는 X^2+4X이고, B기업의 비용함수(C_b)는 Y^2+3Y+X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정부 정책수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X>0, Y>0이다.)

① B기업에 환경세를 부과한다.

② 외부성을 유발하는 물질에 대한 신규시장을 개설한다.

③ 두 기업을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통합한다.

④ 두 기업 간 거래비용이 매우 적고, 협상으로 인한 소득재분배의 변화가 없을 경우 자발적 타협을 유도한다.

⑤ 정부가 X재와 Y재의 사회적 최적량을 생산하도록 수량을 규제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비용함수에 나타난 외부비용의 유발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고,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정책수단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B기업의 비용함수 $C_b = Y^2 + 3Y + X$에 A기업의 생산량 X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A기업이 X재를 생산할수록 B기업의 비용이 증가한다. 따라서 외부성의 유발자는 A기업이고 피해자는 B기업이며, X재의 한계외부비용은 $\partial C_b/\partial X = 1$이다. 피구세는 피해자가 아니라 외부비용을 유발하는 주체에게 부과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B기업에 환경세를 부과한다'이다. B기업은 X재 생산으로 비용이 증가하는 피해자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외부성을 유발하는 A기업에 X재 한 단위당 한계외부비용 1만큼의 환경세를 부과한다.

② O — 외부성을 유발하는 물질에 시장을 만들고 거래 가능한 권리를 부여하면 외부효과에 가격이 형성되어 외부비용을 내부화할 수 있다.

③ O — 두 기업을 공동 소유하도록 통합하면 통합된 주체가 A기업의 생산이 B기업 비용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고려하므로 외부성이 내부화된다.

④ O — 거래비용이 매우 작고 협상에 따른 소득재분배가 자원배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당사자 간 자발적 협상으로 효율적인 생산량에 도달할 수 있다.

⑤ O — 정부가 X재 생산의 외부비용을 포함해 X재와 Y재의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직접 정하고 수량을 규제하는 것도 효율적 자원배분을 달성하는 수단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비용이 실제로 늘어나는 기업과 그 비용 증가를 일으킨 기업을 뒤바꾸기 쉽다. C_b에 X가 들어 있다는 것은 B기업이 외부성을 유발한다는 뜻이 아니라, A기업의 X재 생산이 B기업에 외부비용을 준다는 뜻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 기업의 비용함수에 다른 기업의 생산량이 들어 있으면 그 교차항의 부호를 먼저 본다. 다른 기업의 생산량이 증가할 때 자신의 비용이 증가하면 그 다른 기업이 부정적 외부성의 유발자이므로, 세금·규제의 직접 대상도 그 유발자이다.

암기 포인트

남의 생산량이 내 비용을 올리면 나는 피해자이고, 세금은 원인 제공자에게 부과한다.

NoteBase

문 24. 두 사람(A, B)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공공재 X의 한계비용(MC_X)은 $2X$, A의 한계효용(MU_A)은 $4-X$, B의 한계효용(MU_B)은 $8-2X$이다. 공공재의 균형량은?

① 2.4

② 2.8

③ 3.0

④ 3.4

⑤ 4.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공공재의 효율적 균형량은 각 개인의 한계효용을 수직으로 합한 사회적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양이다.

조건 정리

A의 한계효용은 $MU_A = 4 - X$, B의 한계효용은 $MU_B = 8 - 2X$, 한계비용은 $MC_X = 2X$이다. 공공재는 두 사람이 같은 양을 함께 소비하므로 개인별 한계효용을 합산한다.

사용할 공식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조건은 $MU_A + MU_B = MC_X$이다. 이는 공공재 한 단위를 추가할 때 사회 전체가 얻는 한계편익이 그 한 단위의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지점에서 순편익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사회적 한계편익은 다음과 같다.

$MU_A + MU_B = (4 - X) + (8 - 2X) = 12 - 3X$

이를 한계비용과 같게 놓으면 다음과 같다.

$12 - 3X = 2X$

$5X = 12, \quad X = 2.4$

따라서 공공재의 균형량은 2.4이다. 이때 두 사람의 한계효용은 모두 음수가 아니며, 사회적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은 각각 4.8로 일치한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 $X = 2.4$에서 사회적 한계편익은 $12 - 3(2.4) = 4.8$, 한계비용은 $2(2.4) = 4.8$로 일치한다.
② X — $X = 2.8$에서는 사회적 한계편익이 3.6, 한계비용이 5.6이므로 균형이 아니다. 2.8이 아니라 2.4가 올바른 균형량이다.
③ X — $X = 3.0$에서는 사회적 한계편익이 3.0, 한계비용이 6.0이므로 균형이 아니다. 3.0이 아니라 2.4가 올바른 균형량이다.
④ X — $X = 3.4$에서는 사회적 한계편익이 1.8, 한계비용이 6.8이므로 균형이 아니다. 3.4가 아니라 2.4가 올바른 균형량이다.
⑤ X — $X = 4.0$에서는 두 사람의 한계효용 합이 0인 반면 한계비용은 8.0이므로 균형이 아니다. 4.0이 아니라 2.4가 올바른 균형량이다.

오답 포인트

공공재의 균형에서는 개인별 한계효용을 따로 한계비용과 비교하거나 수평으로 합하지 않는다. A와 B가 공공재의 같은 양을 소비하므로 한계효용을 수직 합산한 $12 - 3X$를 $2X$와 비교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공재 문제는 각 개인의 한계효용을 같은 공급량에서 합산하고, 그 합을 한계비용과 같게 놓은 뒤 해가 각 개인의 한계효용 구간에서 유효한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공공재의 효율 조건은 한계효용의 수직합과 한계비용의 일치, 즉 $\sum_i MU_i = MC$이다.

NoteBase

문 25.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제에서 안전자산의 수익률은 0이며, 개인은 수익극대화를 추구한다. 위험자산에 비례소득세를 부과하고 손실 보상을 전혀 해주지 않는 경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험부담 행위의 소득탄력성이 양이면, 소득효과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대체효과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려 총효과는 불확실하다.

② 위험부담 행위의 소득탄력성이 음이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모두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③ 위험부담 행위의 소득탄력성이 양이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모두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줄인다.

④ 위험부담 행위의 소득탄력성이 음이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모두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줄인다.

⑤ 위험부담 행위의 소득탄력성이 양이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는 불변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위험자산의 이익에만 비례소득세를 부과하고 손실은 보상하지 않을 때, 대체효과의 방향과 위험부담 행위의 소득탄력성에 따른 소득효과의 방향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대체효과: 이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만 손실은 보상되지 않으므로 위험자산의 수익·손실 구조가 불리해져 위험자산 투자를 줄이는 효과이다.
소득효과: 과세로 실질소득이 감소할 때 위험부담 행위의 소득탄력성이 양이면 위험자산 투자가 줄고, 음이면 오히려 늘어나는 효과이다.
따라서 소득탄력성이 양이면 두 효과가 모두 위험자산 투자를 줄이지만, 음이면 두 효과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어 총효과가 불확실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소득탄력성이 양이면 소득효과는 위험자산 투자를 줄이지만, 대체효과도 투자를 줄인다. 틀린 표현은 '대체효과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려 총효과는 불확실하다'이며, 올바르게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모두 위험자산 투자를 줄인다'이다.
② X — 소득탄력성이 음이면 소득효과는 위험자산 투자를 늘리지만 대체효과는 줄이므로 두 효과의 방향이 반대이다. 틀린 표현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모두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이며, 올바르게는 '소득효과는 늘리고 대체효과는 줄여 총효과가 불확실하다'이다.
③ O — 소득탄력성이 양이면 과세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가 위험자산 투자를 줄이고, 손실 보상 없는 과세가 만드는 대체효과도 위험자산 투자를 줄인다. 따라서 두 효과의 방향이 일치한다.
④ X — 소득탄력성이 음이면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소득효과는 위험자산 투자를 늘린다. 틀린 표현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모두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줄인다'이며, 올바르게는 '소득효과는 늘리고 대체효과는 줄여 총효과가 불확실하다'이다.
⑤ X — 비례소득세는 위험자산의 이익을 줄이는 반면 손실은 보상하지 않으므로 대체효과가 발생하고,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소득효과도 발생한다. 틀린 표현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이며, 올바르게는 '소득탄력성이 양이면 두 효과가 모두 위험자산 투자를 줄인다'이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손실 보상이 없는 과세의 대체효과 방향을 반대로 잡는 것이다. 이 경우 이익만 과세되고 손실은 그대로 부담하므로 대체효과는 위험자산 투자를 줄이는 방향이다. 소득탄력성은 이 대체효과가 아니라 소득효과의 방향을 결정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손실 보상 여부로 대체효과를 판단하고, 다음으로 소득탄력성의 부호로 소득효과를 판단한다. 손실 보상이 없으면 대체효과는 위험자산 투자를 줄인다. 소득탄력성이 양이면 소득효과도 줄이는 방향이므로 총투자가 감소하고, 음이면 소득효과가 늘리는 방향이므로 총효과는 불확실하다.

암기 포인트

손실 보상 없음은 대체효과 감소, 소득탄력성 양은 소득효과 감소, 음은 소득효과 증가이다.

NoteBase

문 26. 시장 내 모든 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추구할 때, 종가세와 종량세의 조세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완전경쟁시장의 경우 과세 후 균형점에서 수요가격과 공급가격의 차만 같으면 종가세와 종량세의 전가는 동일하다.

② 완전경쟁시장의 경우 과세 후 균형점에서 수요가격과 공급가격의 차만 같으면 종가세와 종량세의 조세수입은 동일하다.

③ 독점시장에서 소비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종가세와 종량세가 생산량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면, 종가세의 조세수입이 종량세의 조세수입보다 많아진다.

④ 독점시장에서 소비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종가세와 종량세로 인한 조세수입이 같다면, 종가세의 생산량보다 종량세의 생산량이 더 많아진다.

⑤ 독점시장에서 소비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종가세와 종량세가 생산량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면, 종가세와 종량세의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의 크기는 동일하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에서 종량세와 종가세가 생산량, 조세수입, 사중손실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종량세는 상품 한 단위마다 일정액을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단위당 세액이 고정된다. 종가세는 가격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단위당 세액이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두 세금이 같은 균형에서 수요가격과 공급가격 사이에 같은 조세 쐐기를 만들면 생산량과 양측 가격이 같아져 조세 전가와 조세수입도 같다.
독점시장에서 역수요가격을 P, 한계수입을 MR이라 하면 하향하는 수요곡선에서 $P > MR$이다. 이 차이 때문에 같은 생산량을 만드는 종가세는 종량세보다 더 많은 조세수입을 얻고, 같은 조세수입을 얻는 종가세는 종량세보다 생산량을 덜 감소시킨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완전경쟁시장에서 과세 후 균형의 수요가격과 공급가격 차이는 단위당 조세 쐐기이다. 두 세금의 쐐기가 같은 균형에서는 소비자가 내는 가격과 생산자가 받는 가격이 모두 같으므로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귀착되는 부담, 즉 조세 전가도 동일하다.
② O. 같은 과세 후 균형에서 조세수입은 '단위당 조세 쐐기 × 거래량'이다. 쐐기가 같으면 균형거래량도 같으므로 종가세와 종량세의 조세수입이 동일하다.
③ O. 독점기업이 같은 생산량을 선택하도록 세율을 정하면 종량세의 단위당 세액은 $MR - MC$이고, 종가세의 단위당 세액은 가격에 비례한다. 독점에서는 $P > MR$이므로 같은 생산량에서 종가세의 단위당 세액과 총조세수입이 종량세보다 크다.
④ X. 틀린 표현은 '종가세의 생산량보다 종량세의 생산량이 더 많아진다'이다. 동일한 조세수입을 확보할 때에는 종가세가 독점기업의 생산량을 덜 줄이므로 종가세의 생산량이 종량세의 생산량보다 더 많아진다. 종량세로 조세수입 $T = tq$를 얻는 생산량에서 같은 수입을 내는 종가세율의 세액 비율은 t/P이다. 이때 종가세가 줄이는 한계수입은 tMR/P인데 $MR/P < 1$이므로 이는 종량세가 줄이는 한계수입 t보다 작다. 따라서 종가세 아래의 생산량이 더 많다.
⑤ O. 두 세금이 생산량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생산비용도 동일하다. 조세수입은 사회 내부의 이전이므로 총잉여 계산에서 손실 자체가 아니며, 동일한 생산량 감소가 만드는 사중손실의 크기는 같다.

오답 포인트

③의 '같은 생산량'과 ④의 '같은 조세수입'을 혼동하기 쉽다. 독점에서는 가격이 한계수입보다 크므로 같은 생산량이라면 종가세 수입이 더 크고, 이 관계를 뒤집어 같은 조세수입으로 비교하면 종가세의 생산량이 더 크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같은 조세 쐐기인지 먼저 확인한다. 독점시장에서는 $P > MR$을 기준으로 삼아 '같은 생산량이면 종가세 수입이 더 크고, 같은 조세수입이면 종가세 생산량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 생산량이 같으면 세금의 명칭과 관계없이 총잉여와 사중손실도 같다.

암기 포인트

독점의 종가세는 같은 생산량에서 세수 우위, 같은 세수에서 생산량 우위이다.

NoteBase

문 27. 근로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① 여가가 정상재일 때,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은 늘어난다.

② 여가가 정상재일 때, 비례소득세와 동일한 조세수입을 가져다주는 비왜곡적인 정액세를 부과하는 경우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하다.

③ 여가가 열등재일 때,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은 늘어난다.

④ 여가가 열등재일 때, 비례소득세와 동일한 조세수입을 가져다주는 비왜곡적인 정액세를 부과하는 경우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하다.

⑤ 여가가 열등재일 때, 비왜곡적인 정액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효과만 존재하여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비례소득세와 정액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나누고, 여가가 정상재인지 열등재인지에 따라 소득효과의 방향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비례소득세: 근로소득에 비례하여 과세하므로 순임금을 낮춘다. 이에 따라 여가의 상대가격이 낮아지는 대체효과와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소득효과가 함께 발생한다.
정액세: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과세하므로 여가와 소비의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는다. 따라서 대체효과 없이 소득효과만 발생한다.
대체효과: 순임금 하락은 여가를 상대적으로 싸게 하므로 여가를 늘리고 노동공급을 줄인다.
소득효과: 세금으로 소득이 감소할 때 여가가 정상재이면 여가가 줄어 노동공급이 늘어나고, 여가가 열등재이면 여가가 늘어 노동공급이 줄어든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비례소득세의 대체효과는 여가를 늘려 노동공급을 감소시키고, 여가가 정상재일 때의 소득효과는 여가를 줄여 노동공급을 증가시킨다.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틀린 표현은 '노동공급은 늘어난다'이며, 올바르게는 '노동공급은 감소한다'이다.

② X
여가가 정상재이면 정액세의 소득효과만으로 노동공급이 증가한다. 반면 비례소득세에는 노동공급을 줄이는 대체효과도 있으므로 두 세금의 노동공급 효과가 일반적으로 동일하지 않다. 틀린 표현은 '효과는 동일하다'이며, 올바르게는 '정액세에는 소득효과만 있고 비례소득세에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함께 있어 효과가 일반적으로 다르다'이다.

③ X
여가가 열등재이면 소득 감소에 따른 소득효과도 여가를 늘려 노동공급을 줄이며, 비례소득세의 대체효과 역시 노동공급을 줄인다. 따라서 두 효과의 크기를 비교할 필요 없이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틀린 표현은 '노동공급은 늘어난다'이며, 올바르게는 '노동공급은 감소한다'이다.

④ X
여가가 열등재이면 비례소득세와 정액세 모두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비례소득세에는 대체효과까지 존재하고 정액세에는 소득효과만 존재하므로 효과의 크기까지 동일한 것은 아니다. 틀린 표현은 '효과는 동일하다'이며, 올바르게는 '감소 방향은 같지만 비례소득세에는 추가적인 대체효과가 있어 효과는 일반적으로 동일하지 않다'이다.

⑤ O
정액세는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아 소득효과만 발생한다. 여가가 열등재이면 소득 감소 시 여가 소비가 증가하므로 근로시간, 즉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오답 포인트

세금이 소득을 줄인다는 사실만 보고 노동공급이 항상 늘어난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비례소득세의 대체효과는 항상 노동공급을 줄이지만, 소득효과는 여가가 정상재이면 노동공급을 늘리고 여가가 열등재이면 노동공급을 줄인다. 또한 '방향이 같다'와 '효과가 동일하다'를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세금이 순임금을 바꾸는지 확인한다. 비례소득세이면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모두 보고, 정액세이면 소득효과만 본다. 그다음 여가가 정상재이면 소득 감소가 노동공급을 늘리고, 열등재이면 소득 감소가 노동공급을 줄인다고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비례세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정액세는 소득효과만 발생한다. 순임금 하락의 대체효과는 노동공급 감소이며, 여가가 열등재이면 소득효과도 노동공급 감소이다.

NoteBase

문 28. 스턴(N. Stern)이 주장한 소득세의 최적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불평등에 대한 혐오감지표의 절대값이 낮을수록 최적소득세율은 낮다.
ㄴ. 조세수입 목표가 클수록 최적소득세율은 높다.
ㄷ. 면세점 이상인 소득자에 대해서 최적선형소득세는 최적비선형소득세에 비해 수직적 공평을 제고하는 데 상대적으로 효과적이지 않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스턴의 최적소득세 이론에서 불평등 혐오의 정도, 조세수입 목표, 과세 방식의 유연성이 최적세율과 수직적 공평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스턴의 최적소득세 이론은 소득재분배에 따른 사회적 편익과 근로·소득 창출 유인의 왜곡이라는 비용을 함께 고려한다. 불평등 혐오가 약할수록 재분배의 편익이 작아져 최적소득세율이 낮아지고, 필요한 조세수입이 많을수록 최적소득세율은 높아진다. 또한 비선형소득세는 소득구간별로 세율을 달리 설계할 수 있으므로 단일한 한계세율을 적용하는 선형소득세보다 수직적 공평을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옳지만 ㄴ과 ㄷ도 옳으므로 'ㄱ'만 고른 선택 범위가 불완전하다. 올바르게는 ㄱ, ㄴ, ㄷ을 모두 골라야 한다.
② X — ㄴ은 옳지만 ㄱ과 ㄷ도 옳으므로 'ㄴ'만 고른 선택 범위가 불완전하다. 올바르게는 ㄱ, ㄴ, ㄷ을 모두 골라야 한다.
③ X — ㄱ과 ㄴ은 옳지만 ㄷ도 옳으므로 'ㄱ, ㄴ'은 불완전하다. 선형소득세는 면세점 이상 소득자에게 동일한 한계세율을 적용하여 소득구간별 부담을 세밀하게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선형소득세보다 수직적 공평 제고에 상대적으로 덜 효과적이다. 올바르게는 ㄱ, ㄴ, ㄷ이다.
④ X — ㄴ과 ㄷ은 옳지만 ㄱ도 옳으므로 'ㄴ, ㄷ'은 불완전하다. 불평등 혐오감지표의 절대값이 낮다는 것은 불평등을 줄이는 데 부여하는 사회적 가치가 작다는 뜻이므로 최적소득세율은 낮아진다. 올바르게는 ㄱ, ㄴ, ㄷ이다.
⑤ O — ㄱ, ㄴ, ㄷ이 모두 옳다. 불평등 혐오가 약하면 최적세율이 낮아지고, 조세수입 목표가 커지면 최적세율이 높아지며, 선형소득세는 비선형소득세보다 수직적 공평을 정교하게 달성하기 어렵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ㄷ의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부정 표현이 핵심 함정이다. 비선형소득세는 소득수준에 따라 세율을 달리할 수 있어 수직적 공평을 더 정교하게 구현하므로, 선형소득세가 상대적으로 덜 효과적이라는 ㄷ은 옳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불평등 혐오가 강할수록 재분배 편익이 커져 최적세율이 높아지고, 조세수입 목표가 클수록 필요한 세율이 높아진다고 판단한다. 과세 방식은 소득구간별 조정이 가능한 비선형소득세가 단일 세율의 선형소득세보다 수직적 공평에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스턴의 최적소득세는 '불평등 혐오↑ · 조세수입 목표↑ → 최적세율↑, 수직적 공평은 비선형세가 우위'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29. 생산요소의 조세귀착에 관한 부분균형분석적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노동의 수요탄력성이 무한히 클 경우 근로소득세는 고용주가 모두 부담한다.

② 자본에 과세하는 경우 자본의 개방도가 높을수록 자본공급자의 부담은 높아진다.

③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과세는 토지의 현재 소유자에게 귀착된다.

④ 토지의 공급이 신축적일 경우 토지에 대한 과세는 완전한 자본화를 가져온다.

⑤ 노동의 공급탄력성이 매우 작을 경우 근로소득세는 고용주가 대부분 부담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생산요소에 부과된 조세의 경제적 부담이 수요자와 공급자 중 누구에게 귀착되는지는 법률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조세귀착은 조세 부과 뒤 가격이나 임금이 변하면서 실제 조세부담이 누구에게 이전되는지를 뜻한다.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작은 쪽은 거래를 줄이거나 다른 시장으로 이동하기 어려우므로 조세를 더 많이 부담한다. 반대로 탄력성이 큰 쪽은 쉽게 대체하거나 이동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진다. 토지처럼 공급이 완전히 고정된 생산요소는 공급자가 조세를 전부 부담하며, 영구적인 조세의 현재가치가 자산가격에 반영되는 현상을 조세의 자본화라고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노동수요의 탄력성이 무한대이면 고용주는 임금비용 상승에 매우 민감하여 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고용주가 모두 부담한다'이며, 올바르게는 노동공급자인 근로자가 임금 하락을 통해 조세를 모두 부담한다.

② X — 자본의 개방도가 높아질수록 자본은 과세 지역을 떠나기 쉬워져 자본공급의 탄력성이 커진다. 틀린 표현은 '자본공급자의 부담은 높아진다'이며, 올바르게는 자본공급자의 부담은 낮아지고 자본수요자나 이동하기 어려운 다른 생산요소의 부담이 커진다.

③ O — 토지의 공급이 고정되어 있으면 공급탄력성이 0이므로 토지 소유자는 조세를 다른 경제주체에게 전가할 수 없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조세는 토지가격 하락을 포함하여 현재 토지 소유자에게 귀착된다.

④ X — 토지공급이 신축적이면 공급량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조세부담이 전부 자산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신축적일 경우'와 '완전한 자본화'이며, 올바르게는 공급이 고정된 토지에 영구적인 조세가 부과될 때 미래 조세의 현재가치가 토지가격에 반영되어 완전한 자본화가 나타날 수 있다.

⑤ X — 노동공급의 탄력성이 매우 작으면 근로자는 노동공급을 줄이기 어려우므로 조세를 더 많이 부담한다. 틀린 표현은 '고용주가 대부분 부담한다'이며, 올바르게는 근로자가 임금 하락을 통해 조세를 대부분 부담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과 ⑤는 '탄력성이 큰 쪽이 더 부담한다'고 거꾸로 판단하게 만드는 선지이다. 실제로는 시장에서 이탈하기 어려운 비탄력적인 쪽이 더 부담한다. ④는 토지조세의 자본화와 신축적 공급을 연결한 것이 함정이며, 완전한 자본화는 공급이 고정된 경우와 연결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수요와 공급 중 어느 쪽의 탄력성이 더 작은지 확인한다. 탄력성이 작은 쪽에 조세가 더 많이 귀착되고, 탄력성이 0이면 그쪽이 전부 부담하며, 탄력성이 무한대이면 그쪽은 부담하지 않는다. 자산에 대한 영구적 조세는 미래 조세의 현재가치가 현재 가격에 반영되는지도 함께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조세부담은 비탄력적인 쪽으로, 이동성은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고정된 토지의 영구세는 현재 가격에 자본화된다.

NoteBase

문 30. 정부가 공급하는 상호 독립적인 공공서비스 X와 Y의 한계비용은 각각 $MC_x = 20, MC_Y = 30$이고, 가격은 각각 $P_x = 25$, $P_y = 50$이다. Y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일 때, 요금 책정에 따른 효율성 상실의 극소화를 보장하는 X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① 1

② 2

③ 2.5

④ 3

⑤ 3.5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상호 독립적인 공공서비스에 램지 가격설정 규칙을 적용하여 X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X: $MC_X = 20$, $P_X = 25$

Y: $MC_Y = 30$, $P_Y = 50$, $|\varepsilon_Y| = 1$

구해야 할 값: 효율성 상실을 극소화하는 $|\varepsilon_X|$

주의할 조건: 두 서비스가 상호 독립적이므로 교차가격 효과 없이 역탄력성 규칙을 적용한다.

사용할 공식

램지 가격설정의 역탄력성 규칙은 다음과 같다.

$\frac{P_i - MC_i}{P_i} = \frac{k}{|\varepsilon_i|}$

따라서 두 서비스에는 다음 관계가 성립한다.

$\frac{(P_X - MC_X)/P_X}{(P_Y - MC_Y)/P_Y} = \frac{|\varepsilon_Y|}{|\varepsilon_X|}$

효율성 상실을 최소화하려면 수요가 덜 탄력적인 서비스에 더 높은 가격·한계비용 마진율을 부과해야 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X의 가격·한계비용 마진율은 $\frac{25 - 20}{25} = 0.2$이다.
2. Y의 가격·한계비용 마진율은 $\frac{50 - 30}{50} = 0.4$이다.
3. 역탄력성 규칙을 적용하면 $\frac{0.2}{0.4} = \frac{1}{|\varepsilon_X|}$이다.
4. 따라서 $|\varepsilon_X| = 2$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varepsilon_X| = 1$이면 X의 마진율은 Y와 같은 0.4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0.2이다. 틀린 값 1 → 올바르게는 2이다.
② O — 역탄력성 규칙으로 구한 X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절댓값은 2이다.
③ X — $|\varepsilon_X| = 2.5$이면 X의 마진율은 $0.4/2.5 = 0.16$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0.2이다. 틀린 값 2.5 → 올바르게는 2이다.
④ X — $|\varepsilon_X| = 3$이면 X의 마진율은 $0.4/3$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0.2이다. 틀린 값 3 → 올바르게는 2이다.
⑤ X — $|\varepsilon_X| = 3.5$이면 X의 마진율은 $0.4/3.5$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0.2이다. 틀린 값 3.5 → 올바르게는 2이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가격과 한계비용의 차이 자체가 아니라 가격 대비 마진율 $(P - MC)/P$을 비교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마진율과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반비례하므로, X의 마진율 0.2가 Y의 0.4보다 작으면 X의 수요는 Y보다 더 탄력적이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재화의 $(P - MC)/P$를 먼저 계산한 뒤, 마진율과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반비례한다는 관계를 세워 미지의 탄력성을 구한다.

암기 포인트

램지 가격설정은 '덜 탄력적일수록 높은 마진율'이다.

NoteBase

문 31. 코즈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가 소유권을 설정하면, 자발적 거래에 의하여 시장실패가 해결된다는 정리이다.

② 외부성이 있는 재화의 과다 또는 과소 공급을 해소하는 대책에 해당한다.

③ 외부불경제의 경우 이해당사자 중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더라도 코즈 정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외부성 문제 해결에 있어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해결 방안이다.

⑤ 코즈 정리는 외부성 관련 당사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거래비용이 작을 때 적용이 용이하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코즈 정리가 외부성을 해결하는 조건과 그 결과가 효율성·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코즈 정리는 재산권이 명확하고 거래비용이 없거나 매우 작으면 외부성의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협상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정리이다. 초기 재산권의 귀속은 협상 후의 효율적 자원배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협상에 따른 이익의 분배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 정부가 재산권을 명확히 설정하면 당사자들이 그 권리를 토대로 자발적으로 거래하여 외부성으로 인한 비효율을 해결할 수 있다. 다만 거래비용이 없거나 매우 작아야 한다.
② O — 코즈식 협상은 외부편익에 따른 과소 공급이나 외부비용에 따른 과다 공급을 효율적 수준으로 조정하는 외부성 대책이다.
③ O — 코즈는 외부성 문제를 어느 한쪽만의 일방적 가해가 아니라 당사자 간 상호적인 문제로 본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먼저 절대적으로 구분하는 것보다 재산권을 명확히 정하고 협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코즈 정리는 자발적 협상을 통한 효율적 자원배분을 설명하지만, 초기 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소득분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평성까지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⑤ O — 거래비용이 작을수록 협상으로 얻는 편익이 비용을 넘기 쉬우므로 코즈식 자발적 협상이 이루어지기 쉽다.

오답 포인트

④는 '효율적 배분'과 '공평한 분배'를 같은 결과로 묶은 것이 함정이다. 코즈 정리가 강조하는 것은 협상 결과의 효율성이며, 초기 재산권 배분에 따른 형평성 문제는 별도로 남는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산권의 명확성, 낮은 거래비용, 자발적 협상은 코즈 정리의 핵심 조건으로 판단한다. ‘초기 재산권과 관계없이 효율적 배분’은 맞지만, ‘분배 결과나 형평성도 같다’는 표현은 틀린 것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코즈 정리는 재산권 명확화와 낮은 거래비용 아래 효율성을 달성하지만, 형평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NoteBase

문 32. 다수가 사용하는 공공재의 최적공급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배제성이 존재할 경우에도 공공재의 정확한 수요를 도출할 수 있다.

② 공공재의 전체 수요곡선은 개별수요곡선을 수평으로 합계한 것이다.

③ 공공재의 최적공급 상황에서는 동일한 소비량에 대하여 상이한 가격을 지불하게 된다.

④ 파레토 효율은 공공재 개별 이용자의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할 때 달성된다.

⑤ 공공재의 각 이용자가 부담하는 공공재 가격은 공급에 따르는 한계비용과 일치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조건과 린달균형에서 수요를 합산하는 방식 및 개인별 부담가격의 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공공재는 여러 사람이 동일한 공급량을 함께 소비하므로 시장수요는 각 개인의 한계편익을 수직으로 합산해 구한다. 파레토 효율적 공급조건은 모든 이용자의 한계편익 합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것이다: $\sum_i MB_i = MC$. 린달균형에서는 각 이용자가 동일한 공공재 수량을 소비하지만, 자신의 한계편익에 대응하는 서로 다른 개인별 가격을 부담하며 그 가격의 합이 한계비용과 일치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정확한 수요를 도출할 수 있다'이다. 비배제성 때문에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이용하려는 무임승차 유인이 생기므로 개인이 선호와 지불의사를 진실하게 드러내지 않아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기 어렵다.
② X — 틀린 표현은 '수평으로 합계'이다. 공공재는 모두가 동일한 수량을 함께 소비하므로 전체 수요곡선은 동일한 수량에서 각 개인의 지불의사, 즉 한계편익을 수직으로 합산한다.
③ O — 린달균형에서는 모든 이용자가 동일한 공공재 수량을 소비하면서도 선호와 한계편익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별 가격을 부담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개별 이용자의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이다. 효율조건은 개별 한계편익 각각이 아니라 모든 이용자의 한계편익 합이 한계비용과 일치하는 $\sum_i MB_i = MC$이다.
⑤ X — 틀린 표현은 '각 이용자가 부담하는 가격은 한계비용과 일치'이다. 각 이용자의 개인별 가격은 그 이용자의 한계편익과 일치하고, 개인별 가격을 모두 합한 값이 공급의 한계비용과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사적재의 수평합과 공공재의 수직합을 뒤바꾸거나, '각 개인의 한계편익·가격'과 '그 합'을 혼동하기 쉽다. 특히 ④와 ⑤는 합계 조건을 개인별 조건으로 바꾼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공재 문항에서는 먼저 공동소비 때문에 수량은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한다. 이어 동일 수량에서 한계편익을 수직합하고, 효율조건은 한계편익의 합과 한계비용의 일치이며, 린달가격은 개인별로 다르되 그 합이 한계비용이라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공공재는 수량은 같고 가격은 다르며, 한계편익은 수직합하고 개인별 가격의 합은 한계비용이 된다.

NoteBase

문 33. 조세의 근거학설 가운데 이익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익의 크기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므로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는다.

② 외부성이 있는 공공재의 공급재원 조달은 어렵다.

③ 공공서비스로부터의 편익에 비례해 부담하기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

④ 빅셀이 제시한 자발적 교환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⑤ 소득재분배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출 재원을 조달하기 어렵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조세의 이익설이 편익에 따라 세 부담을 정한다는 점과 그에 따른 장점·한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이익설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서 얻는 편익을 조세 부담의 근거로 보는 견해이다. 납세를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파악하므로 자발적 교환의 성격과 근로유인 보존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공공재의 편익 측정과 진실한 선호 표출이 어렵고 소득재분배 재원 조달에도 한계가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 이익설에서는 공공서비스로부터 얻는 편익에 따라 조세를 부담한다. 부담과 편익이 연결되므로 조세를 단순한 소득 상실로 보는 경우보다 근로의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작다.
② O — 외부성이 있는 공공재는 편익이 비배제적으로 퍼져 개별 수혜자의 편익을 정확히 측정하고 그에 맞는 부담을 부과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익설만으로 공급재원을 조달하기 어렵다.
③ X — 틀린 표현은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이다. 공공재는 비배제성 때문에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도 편익을 얻을 수 있고, 개인은 세 부담을 줄이려고 자신의 편익이나 선호를 축소해 밝힐 유인이 있다. 올바르게는 '편익에 비례해 부담시키려 해도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이다.
④ O — 빅셀의 자발적 교환이론은 공공서비스의 편익과 조세 부담을 하나의 교환관계로 파악하므로 이익설에 근거한다.
⑤ O — 소득재분배 지출의 주된 수혜자는 조세 부담 능력이 낮은 경우가 많다. 수혜자가 얻는 편익에 비례해 부담시키는 이익설로는 재분배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조달하기 어렵다.

오답 포인트

③은 '편익에 비례해 부담한다'는 이익설의 원칙을 그 원칙이 현실에서 완전히 구현된다는 뜻으로 바꾼 선지이다. 공공재에서는 편익 측정과 선호의 진실한 표출이 어려우므로 무임승차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익설 선지는 먼저 '받은 편익만큼 부담한다'는 기준에 맞는지 확인한다. 그다음 공공재의 비배제성, 편익 측정의 곤란, 선호 은폐와 무임승차, 재분배 재원 조달의 한계를 부정하는 표현이 있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이익설은 편익만큼 부담하지만, 공공재의 무임승차와 재분배에는 약하다.

NoteBase

문 34. 순수독점시장의 수요함수는 $Q = 300 - 3P$이고, 독점공급자의 총비용 함수는 $TC = \frac{1}{2}Q^2 + 10Q + 20$이다. 정부가 소비자에게 20의 조세를 부과할 때 옳지 않은 것은?

① 세전 균형 거래량은 $Q = 54$이다.

② 세전 균형 가격은 $P = 82$이다.

③ 세후 균형 거래량은 $Q = 42$이다.

④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단위당 세금은 12이다.

⑤ 공급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단위당 세금은 16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소비자에게 단위세를 부과했을 때 독점기업이 받는 순가격을 기준으로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을 일치시키고, 세후 소비자가격과 생산자 순가격의 변화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역수요함수는 $P_c = 100 - \frac{Q}{3}$이고 한계비용은 $MC = Q + 10$이다. 소비자에게 단위당 20의 조세가 부과되면 소비자가 내는 가격을 P_c, 공급자가 받는 순가격을 P_s라 할 때 $P_c = P_s + 20$이다. 따라서 세후 공급자 기준 역수요함수는 $P_s = 80 - \frac{Q}{3}$이다.

사용할 공식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은 $MR = MC$이다. 선형 역수요함수 $P = a - bQ$에서 총수입은 $TR = aQ - bQ^2$, 한계수입은 $MR = a - 2bQ$이다. 조세 부담은 세전 가격과 비교한 소비자가격의 상승분과 공급자 순가격의 하락분으로 나눈다.

계산 과정

1. 세전에는 $MR = 100 - \frac{2Q}{3}$이므로 $100 - \frac{2Q}{3} = Q + 10$에서 $Q = 54$이다. 세전 가격은 $P = 100 - \frac{54}{3} = 82$이다.
2. 세후에는 공급자가 받는 순가격이 $P_s = 80 - \frac{Q}{3}$이므로 $MR_s = 80 - \frac{2Q}{3}$이다. $80 - \frac{2Q}{3} = Q + 10$에서 $Q = 42$이다.
3. 세후 소비자가격은 $P_c = 100 - \frac{42}{3} = 86$이고, 공급자 순가격은 $P_s = 86 - 20 = 66$이다. 따라서 소비자 부담은 $86 - 82 = 4$, 공급자 부담은 $82 - 66 = 16$이며 합계는 20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세전의 $MR = MC$ 조건에서 균형 거래량은 $Q = 54$이다.
② O. 세전 거래량 $Q = 54$를 역수요함수에 대입하면 균형가격은 $P = 82$이다.
③ O. 세후 공급자 기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을 일치시키면 균형 거래량은 $Q = 42$이다.
④ X.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단위당 세금은 12'가 틀렸다. 소비자가격은 82에서 86으로 4만큼 상승하므로 올바른 소비자 부담은 단위당 4이다.
⑤ O. 공급자가 받는 순가격은 82에서 66으로 16만큼 하락하므로 공급자의 실제 단위당 조세 부담은 16이다.

오답 포인트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했다는 사실과 경제적 조세 부담을 혼동하면 안 된다. 법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쪽과 관계없이 실제 부담은 세전 가격을 기준으로 소비자가격이 얼마나 올랐고 공급자 순가격이 얼마나 내렸는지로 판단한다. 이 문항에서 ④의 12는 세후 가격 변화로 도출되지 않는 값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세전에는 원래 역수요함수로 $MR = MC$를 풀고, 세후에는 소비자가격과 공급자 순가격 사이에 세액만큼 쐐기를 넣어 공급자 기준 역수요함수를 만든 뒤 다시 $MR = MC$를 푼다. 마지막으로 세전 가격과 세후 양측 가격을 비교해 조세 부담을 나눈다.

암기 포인트

독점의 단위세는 '가격 쐐기 설정 → 세후 $MR = MC$ → 소비자가격 상승분과 공급자 순가격 하락분 계산'의 순서이며, 두 부담의 합은 단위세액과 같다.

NoteBase

문 35. 소득세의 면세점 인상으로 발생한 소득세 감소분 1,000억 원을 재산세의 증세로 보전할 경우에 나타나는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증가를 초래한다.

② 부동산소유자의 실질소득 감소와 재산세 증세의 영향으로 재산수익률이 축소된다.

③ 여가가 정상재인 경우 고소득층의 노동공급의 증감은 불확실하다.

④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진된다.

⑤ 소득분배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같은 세수를 유지하면서 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재산세 부담을 늘릴 때 소득분배, 노동공급, 자산수익률 및 자원배분에 나타나는 효과를 묻는다.

핵심 개념

면세점 인상은 과세가 시작되는 소득 기준을 높여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조치이다. 재산세 증세는 부동산 보유자의 세후 실질소득과 세후 재산수익률을 낮춘다. 이러한 세목 간 부담 이동은 분배를 개선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반드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 소득세 면세점이 높아지면 종전에 과세되던 저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 가처분소득과 실질소득이 증가한다.
② O — 재산세가 늘면 부동산소유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커져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부동산에서 얻는 세후 재산수익률도 낮아진다.
③ O — 여가가 정상재이면 소득세 감소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는 여가 수요를 늘려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반면 재산세 증세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는 여가 수요를 줄여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두 효과의 상대적 크기를 알 수 없으므로 고소득층의 노동공급 증감은 불확실하다.
④ X — 틀린 표현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진된다'이다. 소득세 감세분을 재산세 증세로 보전하면 조세 부담의 대상과 경제적 유인이 달라질 뿐이며, 재산세도 부동산 보유·투자와 자산배분을 왜곡할 수 있으므로 효율성 증진이 보장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이러한 세목 간 전환만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진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이다.
⑤ O — 소득세 면세점 인상은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덜고 재산세 증세는 상대적으로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담을 더하므로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세수 총액이 같다는 사실을 경제적 왜곡도 같거나 더 작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다. ④의 '효율성이 증진된다'는 단정이 함정이며, 세목을 바꾸면 부담 귀착과 노동·저축·투자 유인이 함께 달라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세구조 변경 문제에서는 세수 중립 여부와 별개로 각 세목의 부담 주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세후 수익률 변화, 경제적 유인의 왜곡을 차례로 구분한다. '효율성이 반드시 증진된다'와 같은 단정은 왜곡 감소의 근거가 제시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면세점 인상은 저소득층 세 부담 완화, 재산세 증세는 보유자 세후 수익률 하락, 세수 중립은 효율성 개선을 보장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36. 독점적 경쟁시장 하의 개별 기업에 대한 과세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독점적 경쟁시장의 상품에 과세한 경우, 기업이 충성고객을 확보하였을 때는 전가가 어렵다.

② 독점적 경쟁시장의 상품에 과세한 경우, 상품에 이질성이 높으면 전가가 어렵다.

③ 독점적 경쟁시장의 기업에 대한 이윤세 부과는 기업의 이윤극대화 행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④ 완전경쟁시장 개별 기업의 상품에 과세한 경우에 비해 전가가 어렵다.

⑤ 독점적 경쟁시장의 상품에 과세한 경우, 상품에 동질성이 높으면 전가가 용이하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독점적 경쟁기업의 상품세 전가는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시장지배력에 좌우되는 반면, 비례적 이윤세는 세전이윤을 일정 비율로 줄일 뿐 이윤극대화 산출량을 바꾸지 않는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상품세: 판매량에 따라 부담이 늘어 한계비용에 영향을 주는 세금이다. 기업이 직면한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세금을 전가하기 쉽다.
이윤세: 경제적 이윤에 일정 세율을 곱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세율을 t, 세전이윤을 $\pi(q)$라 하면 세후이윤은 $(1-t)\pi(q)$이므로, $0<t<1$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산출량은 변하지 않는다.
독점적 경쟁기업은 차별화된 상품을 판매하므로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에 직면한다. 충성고객이 많거나 상품 차별성이 클수록 대체가 어려워 수요가 덜 탄력적이고 상품세의 전방전가가 쉬워진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충성고객을 확보하였을 때는 전가가 어렵다'이다. 충성고객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덜 감소하므로 수요가 비탄력적이 되고, 올바르게는 상품세의 전가가 용이해진다.
② X — 틀린 표현은 '상품의 이질성이 높으면 전가가 어렵다'이다. 상품의 이질성, 즉 차별화 정도가 높을수록 가까운 대체재가 줄어 수요가 덜 탄력적이므로, 올바르게는 전가가 용이해진다.
③ O — 비례적 이윤세는 세전이윤 전체에 양의 상수 $(1-t)$를 곱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이윤의 크기는 줄지만 이윤을 최대로 만드는 가격과 산출량의 선택은 변하지 않는다.
④ X — 틀린 표현은 '완전경쟁시장 개별 기업의 상품에 과세한 경우에 비해 전가가 어렵다'이다. 완전경쟁시장의 개별 기업은 시장가격을 받아들이므로 독자적으로 가격을 올릴 수 없지만, 독점적 경쟁기업은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일정한 가격결정력을 가진다. 따라서 올바르게는 완전경쟁시장 개별 기업에 비해 상품세를 전가하기가 더 용이하다.
⑤ X — 틀린 표현은 '상품의 동질성이 높으면 전가가 용이하다'이다. 상품이 동질적일수록 대체재가 많아 가격 인상 시 소비자가 다른 상품으로 이동하기 쉽고 수요가 더 탄력적이므로, 올바르게는 전가가 어려워진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②·⑤는 상품 차별화와 전가 가능성의 방향을 반대로 제시한 함정이다. 충성고객 증가·이질성 증가·차별화 증가는 수요를 덜 탄력적으로 만들어 전가를 쉽게 하고, 동질성 증가는 수요를 더 탄력적으로 만들어 전가를 어렵게 한다. 또한 ③의 이윤세와 상품세를 혼동하면 이윤세도 한계비용을 높인다고 잘못 판단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상품세 전가 문제에서는 먼저 가격 인상 뒤 수요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판단한다. 대체가 어렵고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전가가 쉽다. 이윤세 문제에서는 세후이윤이 세전이윤의 일정 비율인지 확인하며, 일정 비율이라면 이윤극대화 선택은 그대로이다.

암기 포인트

충성·차별화는 비탄력적 수요와 쉬운 전가로 이어지고, 비례적 이윤세는 이윤의 크기만 줄이며 극대화 선택은 바꾸지 않는다.

NoteBase

문 37. 주어진 소득으로 개인이 재화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립성을 저해하는 과세 방식은?

① 소득세만 부과한다.

② 소득세를 부과한 이후에 특정 재화에 물품세를 부과한다.

③ 소득세와 일반소비세를 부과한다.

④ 모든 재화에 대해 동일한 물품세를 동시에 부과한다.

⑤ 소득효과만 있고 대체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조세를 부과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과세가 재화 사이의 상대가격을 바꾸어 소비자의 선택에 대체효과를 일으키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소비 선택에 대한 조세의 중립성이란 과세가 재화 사이의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아 소비자가 과세 전과 같은 기준으로 재화 묶음을 선택할 수 있는 성질이다.
중립적인 조세는 구매력만 감소시키는 소득효과를 일으키지만, 특정 재화에만 부과되는 선택적 물품세는 그 재화의 상대가격을 높여 대체효과까지 일으킨다.

선지별 해설

① X — 소득세만 부과하면 주어진 소득으로 재화를 고르는 단계에서 재화 사이의 상대가격은 변하지 않으므로 소비 선택의 중립성을 저해하지 않는다. '중립성을 저해한다'가 아니라 '구매력만 감소시켜 소득효과를 일으킨다'로 판단해야 한다.
② O — 소득세 부과 후 특정 재화에만 물품세를 추가하면 그 재화의 상대가격이 상승한다. 소비자는 과세된 재화를 덜 사고 다른 재화로 대체하므로 대체효과가 발생하여 중립성이 저해된다.
③ X — 일반소비세는 모든 소비에 일반적으로 부과되어 재화 사이의 상대가격을 동일하게 유지하므로, 소득세와 함께 부과하더라도 소비재 선택 자체를 특정 방향으로 왜곡하지 않는다. '중립성을 저해한다'가 아니라 '전체 구매력을 줄이되 재화 간 상대가격은 바꾸지 않는다'가 올바른 판단이다.
④ X — 모든 재화에 동일하게 물품세를 부과하면 특정 재화만 상대적으로 불리해지지 않아 재화 간 상대가격이 유지된다. '중립성을 저해한다'가 아니라 '균일한 과세이므로 소비 선택에 중립적이다'로 고쳐야 한다.
⑤ X — 소득효과만 있고 대체효과가 없는 조세는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는 조세이므로 중립적이다. '중립성을 저해한다'가 아니라 '중립성을 유지한다'가 올바른 표현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세금이 추가되어 부담이 커지는 것과 소비 선택이 왜곡되는 것을 혼동하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②의 '특정 재화'이다. 특정 재화만 과세하면 상대가격이 바뀌어 대체효과가 발생하지만, 모든 재화에 일반적·동일하게 과세하면 구매력은 줄어도 재화 간 선택 기준은 유지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과세 전후의 재화 간 상대가격이 변하는지를 먼저 본다. 특정 재화만 더 비싸지면 대체효과가 생겨 비중립적이고, 모든 재화의 가격이 같은 비율로 변하거나 소득만 줄면 상대가격이 유지되어 중립적이다.

암기 포인트

특정 재화 과세는 상대가격 변화·대체효과·비중립, 일반적 과세는 상대가격 불변·소득효과·중립이다.

NoteBase

문 38. 시장에 존재하는 불확실성 완화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덕적 해이의 축소와 역선택의 확대

② 위험분산

③ 보험제도 실시

④ 조건부거래시장 개설

⑤ 정보의 확산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시장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장치와 정보 비대칭을 심화하는 현상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시장 불확실성의 완화란 위험을 여러 주체에게 나누거나, 미래 상태별 거래 수단을 마련하거나, 정보를 더 널리 제공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와 정보 격차의 영향을 줄이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는 거래 후 감시가 어려워 정보를 가진 쪽이 위험한 행동을 더 하는 현상이고, 역선택은 거래 전 정보 비대칭 때문에 질이 나쁜 상품이나 위험이 큰 사람이 더 많이 선택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두 현상은 모두 축소되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도덕적 해이의 축소'는 불확실성 완화에 도움이 되지만, '역선택의 확대'는 정보 비대칭에 따른 시장 실패를 심화한다. 틀린 표현은 '역선택의 확대'이며, 올바르게는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축소'이다.
② O — 위험분산은 하나의 불확실한 손실을 여러 자산이나 여러 경제주체에게 나누어 개별 주체가 부담하는 위험을 줄인다.
③ O — 보험제도는 보험료를 모아 우연한 손실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하므로 개인이 감당해야 할 불확실한 손실을 완화한다.
④ O — 조건부거래시장은 미래에 특정 상태가 발생했을 때의 지급이나 거래를 미리 약정하게 하여 상태별 위험을 배분할 수 있게 한다.
⑤ O — 정보의 확산은 거래 당사자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여 잘못된 선택과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도덕적 해이의 축소'라는 옳은 표현과 '역선택의 확대'라는 틀린 표현을 한 선지에 묶었다. 일부만 옳아도 선지 전체는 옳지 않으며, 특히 '확대'라는 방향 표현이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방안이 위험을 분산하는지, 미래 상태별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지,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지를 확인한다.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은 시장 실패이므로 '축소'는 완화 방향이고 '확대'는 악화 방향이다.

암기 포인트

위험은 분산하고, 거래는 상태별로 준비하며, 정보는 확산하고,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은 축소한다.

NoteBase

문 39. 정부가 저소득층 아동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립학교용 교육바우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립초등학교 지원율을 높일 것이다.

② 사립과 공립초등학교 간 선택의 폭이 늘어날 것이다.

③ 사립초등학교의 신설이 늘어날 것이다.

④ 사립과 공립초등학교 간 경쟁이 높아질 것이다.

⑤ 공립초등학교의 신설이 늘어날 것이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교육바우처가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선택과 사립학교 수요·공급, 학교 간 경쟁에 미치는 효과를 묻는다.

핵심 개념

교육바우처는 정부가 학생에게 교육비의 구매력을 제공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교를 선택하게 하는 수요자 지원 방식이다. 사립학교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저소득층에 지급하면 사립학교 이용의 비용 부담이 낮아져 사립학교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사립학교의 진입과 공립·사립 학교 간 경쟁이 촉진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 바우처가 사립초등학교 교육비 부담을 낮추므로 저소득층 아동의 사립초등학교 지원율이 높아질 수 있다.
② O — 가계가 공립초등학교뿐 아니라 사립초등학교도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므로 학교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③ O — 사립초등학교에 대한 유효수요가 증가하면 이를 충족하기 위한 사립초등학교의 신설·진입 유인이 커진다.
④ O — 학생과 그에 연계된 재원을 확보하려는 유인이 생기므로 사립초등학교와 공립초등학교 간 경쟁이 높아질 수 있다.
⑤ X — 틀린 표현은 '공립초등학교의 신설이 늘어날 것이다'이다. 바우처는 사립초등학교 선택을 지원하여 사립학교 수요와 진입을 늘리는 제도이므로, 올바르게는 '사립초등학교의 신설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해야 한다. 공립초등학교의 신설 증가를 직접 유발하는 제도가 아니다.

오답 포인트

바우처가 교육 전반에 대한 정부지출을 늘린다는 점만 보고 모든 학교의 신설이 증가한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의 바우처는 사립학교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수요자 지원이므로 직접적인 수요 증가와 진입 유인은 사립초등학교 쪽에서 발생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바우처의 사용처와 지원 대상을 먼저 확인한다. 사립학교에 사용할 수 있는 학생 대상 바우처라면 '사립학교의 실질 가격 하락 → 사립학교 수요 증가 → 사립학교 진입 및 학교 간 경쟁 증가'의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교육바우처는 학교에 직접 주는 돈이 아니라 학생의 선택권에 붙는 돈이다. 사립학교 바우처는 사립 수요·진입과 공립·사립 간 경쟁을 높인다.

NoteBase

문 40. 환경정책 시행을 통해 발생하는 편익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 조건부가치측정법은 현시된 선호에 기초해 환경의 질 개선에 대해 사람들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편익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② 회피행위접근법은 환경오염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을 편익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③ 헤도닉가격접근법은 환경질 악화로 손실을 본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편익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④ 지불의사접근법은 환경재의 질적 개선으로 인한 가격상승폭을 편익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⑤ 여행비용접근법은 환경재를 이용함에 있어 가상적인 효과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얼마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는 방법을 통해 측정하는 방법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환경편익 측정법을 실제 시장행동에서 가치를 추론하는 현시선호법과 가상 상황에 대한 응답으로 가치를 묻는 진술선호법으로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조건부가치측정법: 가상적인 환경 변화 상황을 제시하고 최대 지불의사액 등을 직접 질문하는 진술선호법이다.
회피행위접근법: 오염이나 환경위험을 줄이려고 실제로 지출한 방어·회피 비용에서 환경개선의 편익을 추정하는 현시선호법이다.
헤도닉가격접근법: 주택가격이나 임금처럼 환경의 질이 반영된 시장가격의 차이에서 환경가치를 추정하는 현시선호법이다.
지불의사접근법: 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이 최대로 지불하려는 금액으로 편익을 평가하는 접근이다.
여행비용접근법: 휴양지 등을 방문하는 데 든 여행비용과 방문행동에서 그 환경재의 이용가치를 추정하는 현시선호법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현시된 선호에 기초해'이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은 가상적인 환경 개선 상황을 제시하고 지불의사액을 직접 묻는 진술선호법이다.
② O — 오염 위험을 피하려고 실제로 지출하는 정수기·방음시설 등의 회피 비용을 이용해 환경개선의 편익을 측정하는 회피행위접근법의 설명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개선을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다. 헤도닉가격접근법은 환경의 질 차이가 주택가격이나 임금 등 시장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리하여 환경가치를 추정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질적 개선으로 인한 가격상승폭'이다. 지불의사접근법은 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해 개인이 최대로 지불하려는 금액을 편익으로 측정한다. 시장가격의 차이로 환경가치를 추정하는 것은 헤도닉가격접근법이다.
⑤ X — 틀린 표현은 '가상적인 효과를 제시하고 얼마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는'이다. 여행비용접근법은 환경재를 이용하기 위해 실제로 부담한 여행비용과 방문 횟수에서 이용가치를 추정한다. 가상 상황에서 지불의사액을 묻는 것은 조건부가치측정법이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⑤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의 '가상 상황·직접 질문'이라는 특징을 각각 현시선호와 여행비용접근법에 잘못 붙였고, ③과 ④는 헤도닉가격접근법의 '시장가격에 반영된 환경가치'와 지불의사액을 뒤바꾸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실제 지출·가격·방문행동을 관찰하면 현시선호법이고, 가상 상황을 제시한 뒤 지불의사액을 직접 물으면 조건부가치측정법이다. 실제 회피 비용은 회피행위접근법, 주택가격·임금의 차이는 헤도닉가격접근법, 여행비용과 방문 횟수는 여행비용접근법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가상 설문은 조건부가치, 방어 지출은 회피행위, 집값·임금은 헤도닉가격, 방문비용은 여행비용이다.

NoteBase